

2019 제2회 대한민국 사회적경제 박람회

사회적경제로 그리는 사회 지향과 실천

주최 사회적경제연구원 소셜경영연구소
사회적경제활성화전국네트워크
사회투자지원재단
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한국협동조합연구소

주관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대표인사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포럼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점표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공동대표(주민신협이사장)

사회적경제 박람회는 다양한 법과 정책 안에서 성장하고 있는 사회적경제 제 조직의 공통 지향과 사회적 책임을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올해 두 번째 개최를 우선 축하합니다.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가 마련한 본 포럼은, 사회적경제의 활성화를 요청하는 우리 사회의 절박함에 응답하고자 하는 현장 활동가들의 열망을 모으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사회적경제는 일시적 현상이거나 정책의 부산물이 아닙니다. 인간사의 한계상황, 사회적 제약 상황 속에서도 함께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사회)의 공동 행동으로 언제나 있어왔던 사회적 존재의 생활 양식입니다. 근대사회에 들어서 산업사회, 자본주의 경제시스템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특화되어 왔을 뿐입니다.

사회적경제가 요청되는 시기는 참으로 어려운 때라는 것을 말합니다. 고용없는 성장, 인간의 가치에 대한 의문과 새로운 시대를 열어 가고자 하는 뜨거운 시기입니다. 사회적경제에 기대를 거는, 직접 행동을 하고자 하는 모든 이들에게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포럼에서는, 짧지 않은 시간 동안 많은 실험을 통해 조직의 변화를 만들어 내고 연대를 통한 위로를 만들어 낸 사례를 공유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기 위한 연대로의 초대 를 하고 있습니다. 함께 한 여러분들이 더 넓고 깊은 연대와 공동 전선을 만들어 가시는 데에 밑거름이 되길 바랍니다.

포럼 인사말

제2회 대한민국 사회적경제 박람회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포럼을 축하하며.....

김혜경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공동대표(충남사회적경제협의회 상임대표)

아동교육자들은 어린이들의 마음은 깨끗한 도화지와 같아서 선생님의 말과 행동, 그리고 가치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우리 사회가 흰 도화지 같다면 사회적경제의 붓으로 그리는 그림들은 분명히 아름답고 조화로우려 것으로 기대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죠. 이미 너무나 다양한 색과 형상이 이미 바탕에 질게 깔려있고 심지어 어떤 곳은 온통 검은 색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를 표현할 수 있을까요? 기존의 바탕색이나 바탕의 그림과는 확실히 구별되는 ‘차이와 다름’을 통해서 우리의 지향점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붓의 재질을 바꾸거나, 바탕과는 분명히 대비되거나 조화되는 색과 모양을 찾아내고 이를 꾸준히 그려나가는 거죠.. 쉽지 않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더 크고 힘이 강력한 붓과 진한 색으로 쭉쭉 도화지의 많은 영역을 채워나가기 때문이죠.

이번 포럼에서는 혼탁한 우리사회의 삶의 현장에서 사회적경제방식의 삶을 꿈꾸며 ‘차이와 다름’을 지향하며 고민하고 도전해 온 여러분들의 이야기들이 펼쳐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리가 다른 그림을 그리려면 우리는 다른 꿈을 꾸어야 하고, 그 꿈을 이루는 방식도 달라야 하겠죠. 그리고 그 ‘다른 꿈’에 대한 확신을 서로 나누며 지향의 같음을 확인하고, 지지하며 그 다른 꿈을 실천하는 힘을 얻는 거대한 연대를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꿈꾸는 사회적경제는 Night Dream이 아니고 ‘Day Dream’입니다. 우리 사회가 아직은 이루지 못하고 있는 연대와 공유를 통한 상생의 꿈을 ‘낮꿈’으로 꾸는 우리들은 기꺼이 ‘다가올 그 사회 - Society to come’를 함께 이루어가는 실천적 몽상주의 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번 포럼에서 우리 각각의 낮꿈 들을 공유하고 확인하고 실천적 전략을 모색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박람회 선언문

2019 사회적경제 대전 선언문

2019 대한민국 사회적경제박람회 추진위원회

한국사회에서는 지금 구조적 변혁이 시작되고 있다. 수십 년 간의 성장과 발전은 한국 경제를 선진국 대열에 함께 서게 만들었지만, 그 뒤에는 불안정 노동의 확산, 지역 공동체의 해체, 지역 격차와 환경 파괴, 사회적 양극화가 널리 만연되고 있다. 사람 간, 지역 간 갈등이 커지고 있으며 연대보다는 분열이, 공존보다는 경쟁이 우선의 가치가 되어 왔다.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이다. 거대자본과 정보기술의 발달은 국가의 울타리를 뛰어넘어 불평등을 가속화하여 왔으며, 마침내 전 세계인은 지속가능한 사회를 향해 지혜를 모으게 되었다. 이 속에서 사회적경제는 한국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새로운 대안 모델로서 커다란 흐름을 만들고 있다. 우리는 어디로 나아가고 있는가?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한국사회에서 사회적경제의 역사는 짧지 않다. 일제 강점기의 식민 상황에서, 한국전쟁 후의 빈궁함에서, IMF 실업의 광풍 속에서, 나라가 위기에 닥칠 때마다 사회적경제는 모습을 드러냈다. 가게를 만들고 병원과 은행을 운영하고 공장을 지어 우리의 필요를 공동으로 해결하고자 노력해왔다. 올바른 먹거리, 지속가능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힘 있는 자는 힘을, 지혜가 있는 자는 지혜를, 돈이 있는 자는 돈을 내어 연대의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다. 돈이 아닌 사람을, 이윤이 아닌 필요를 중심에 놓고, 성별과 연령과 장애와 소득과 국적에 상관없이 모두가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사회적 가치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바탕으로 고통받는 당사자와 공공의 이익에 복무하기 위한 실험과 도전을 곳곳에서 벌이고 있다.

특히 최근 2년 사이에 정부의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을 지렛대로 변화와 혁신의 에너지가 분수처럼 솟아나고 있다. 전통적 협동조합과 사회적경제의 협력이 본격화되고 있으며, 사회적 가치 중심의 사고가 확장되고 있다. 지역마다 업종마다 집단마다 네트워크

크가 만들어지고 있으며 다양한 거버넌스가 확대되고 있다. 미래세대를 위한 사회적 교육이 보편화하고 있으며 사회적금융이 모습을 갖추어가고 있다. 청소년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남녀노소와, 도시와 농어촌 방방곡곡에서 문화예술, 교통, 산업의 모든 분야에서 사회적경제 방식의 실험이 펼쳐지고 있다.

이러한 시민사회의 도전이 더욱 온전하고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2019년 사회적경제 박람회를 맞이하여 이 새로운, 거대한 전환의 물결에 몸을 실은 사회적경제인들이, 이제 그 실천적 결의를 밝힌다.

첫째, 사회적 가치와 연대의 경제를 우위에 놓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한다.

이미 존재하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연대를 강화하고, 다양한 사회적 실험으로서 사회적경제의 발전을 촉진하는 사회적경제기본법 등의 제정에 힘쓴다. 지역 격차 없이 사회적경제가 뿌리내리는 제도적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전국적인 노력을 기울인다. 사회적변영을 해치는 경제 행위는 제어하고, 사회적경제의 활성화를 가로막는 제도적 장벽은 개선해 나가야 한다.

둘째, 변화를 향한 사회적경제의 메시지와 실험을 사회적으로 전파한다.

사회적경제의 협동과 연대의 전략이 지향하는 구상과 목표를 모든 사회에 전파하고, 지역사회의 다양한 사회적 자원에 기초하는 진취적 실험을 통하여 협력과 연대 경제의 모델을 만들고 확산한다.

셋째, 변화의 주역으로서 당사자의 문제해결능력과 조직을 강화해 나간다.

사회적 문제는 개인의 삶을 통해 드러나고, 문제 해결을 위한 과정에는 사회적 협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활동할 의지와 신념을 가진 사회적경제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사회와 협력 체제를 만들기 위한 민민, 민관의 협의체계를 구축해 나간다.

넷째, 공공성의 가치에 기반하여, 지역사회의 시민사회, 공공기관, 기업 등과 다양한 거버넌스를 구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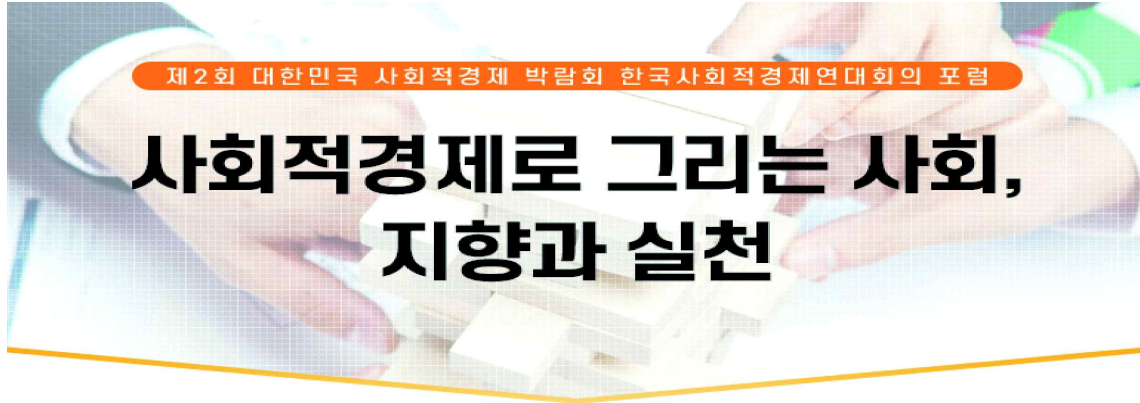
협력의 구체적인 공간인 지역을 배경으로, 저마다의 특색과 역량에 기초하여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를 만들어가는 주체로서 분발할 것을 다짐한다.

사회적경제는 자발적인 동기에서 시작되고, 자조와 협동의 실천으로 운영되며, 배려와 연대로 확장된다. 샵터와 일터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민주적으로 운영하고 공동으로 참여하여 성과를 만들어가는 지속가능한 사회적 연결망이다.

우리는 개인에게는 용기를, 지역사회에는 웃음을, 미래세대에게는 희망을 주는 사회적 경제를 만들고자 한다. 우리는 선배들의 발자국을 이어받아 오늘의 이웃들과 연대할 것이며 내일의 세대에게 더 나은 미래를 물려줄 것이다.

2019. 7. 5.

포럼진행순서



사회 : 변형석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상임대표)

14:00 ~ 14:20	주발제 내가 꿈꾸는 사회적경제	김기섭 (자유연구자)
부문의 전략과 실천		
14:20 ~ 14:35	사례발표 1 모심과 살림으로 협동하고 연대한다	강순원 (한살림제주 상무이사)
14:35 ~ 14:50	사례발표 2 꿈은 이루어질까?	박찬무 (사회적기업 즐거운 밥상 대표)
지역연대 전략과 실천		
14:50 ~ 15:05	사례발표 3 대구 민관거버넌스의 경험과 과제	강현구 (대구사회적기업협의회 대표)
15:05 ~ 15:20	사례발표 4 대전 사회적경제 혁신플랫폼 실험	조세종 (사회적경제연구원 소셜경영연구소장)
15:20 ~ 15:35	휴식시간	
15:35 ~ 15:50	토론 1	장동영 (원주 밝음신탁 상임이사)
15:50 ~ 16:05	토론 2	김경민 (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
16:05 ~ 16:25	토론 3	신명호 (사회투자지원재단 사회적경제연구센터 소장)
16:25 ~ 17:00	전체토론	

차 례

I. 주발제

내가 꿈꾸는 사회적경제	11
	(자유연구자 김기섭)


II. 사례발표

모심과 살림으로 협동하고 연대한다.	23
	(한살림제주 상무이사 강순원)
꿈은 이루어지고 있을까	33
	((주)즐거운밥상대표/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 이사장 박찬무)
대전사회적경제 혁신플랫폼 실험	47
	(사회적경제연구원 소셜경영연구소 소장 조세종)
대구민관거버넌스의 경험과 과제	57
	(사회적협동조합동행/사단법인대구사회적기업협의 회장 강현구)

III. 토론

우리가 만들어 갈 사회적경제	65
	(사회투자지원재단사회적경제연구센터 신명호)
불영과불행(不盈科不行)	75
	(원주밝음신협 상임이사 장동영)
시민사회와 사회적경제	85
	(한국YMCA연맹 사무총장 김경민)

2018 사회적경제 보고서	87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소개	101



내가 꿈꾸는 사회적경제

자유연구자 김 기 섭

내가 꿈꾸는 사회적경제

자유연구자 김 기 섭

오늘 나는, 내가 꿈꾸는 사회적경제에 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런 내 이야기가, 각자가 꿈꾸는 사회적경제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회적경제가 옳은지를 따지기 전에, 나는 이런 사회적경제를 꿈꾼다고 이야기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 지금의 사회적경제에 대한 짧은 소감

(1) '해방적 관점'이 사라졌다

먼저, 지금의 사회적경제에 대한 개인적인 짧은 소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를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시각은 매우 다양합니다. 일찍이 장원봉 박사는 이를 다음의 세 가지로 정리한 적이 있습니다.

첫째로, 사회적경제를 통해 시장사회의 대안이 마련될 것이라는 '해방적 관점'이 있습니다. 둘째로, 사회적경제를 실업과 복지 문제 같은 국가와 시장의 한계를 보완하는 기능으로 보는 '보완적 관점'이 있습니다. 셋째로, 사회적경제의 제도화가 결국은 공공부문의 민영화 전략 가운데 하나일 뿐이고, 따라서 시민사회의 자율성이 상실될 것이라는 '비판적 관점'이 있습니다.

물론 나는, 이런 세 가지 관점이 어느 것이 옳으냐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실은 융합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해방적 관점에서 사회적경제는 시장사회를 넘어서는 상상력을 길러야 하고, 보완적 관점에서 사회적경제는 현실 가능한 구체적 대안을 제시해야 하며, 비판적 관점에서 사회적경제는 제도화 이후를 향해 부단히 혁신해야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지금의 사회적경제에는 해방적 관점이 빠진 채 보완적 관점만 팽배해 있습니다. 더욱이 보완의 내용이 대부분 국가 정책에 의해 규정당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이 보완의 전부인 양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보완이 쌓여 해방을 이룰 수 있으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나는 이런 사례를 별로 본 적이 없습니다. 해방적 관점에서 출발한 사회적경제가 보완적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는 많이 봐왔어도, 보완적 관점에서 출발한 사회적경제가 해방을 이루는 경우는 별로 본 적이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이런 경우는 보완으로서의 성과가 크면 클수록 국가와 시장에 수렴되기 일쑤입니다.

물론, 수렴이 반드시 나쁘다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 사회적경제의 성과는 국가와 시장에 수렴돼 우리 사회를 조금씩 변화시켜가야 마땅합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문제는 사실 그 다음에 있습니다. 사회적경제의 성과가 국가와 시장에 수렴되어갈 때, 수렴되어 사회가 조금씩이나마 변화되어갈 때, 그 다음의 혁신적 대안을 어떻게 드러내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는 해방적 관점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해방적 관점에서 그 다음의 구체적 대안을 찾아야만 혁신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경제에 대한 비판적 관점, 즉 민주성·자율성·참여 민주주의의 상실은 따라서 국가나 시장보다 오히려 사회적경제 진영 내부에 그 원인이 있습니다. 정부나 기업이 사회적경제에 많은 관심을 쏟고 있는 지금은,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사회적경제 내부에 해방적 관점이 필요합니다.

(2) 우리의 '사회적경제'가 없다

'사회적경제(social economy)'는 유럽에서 나온 개념입니다. 이런 유럽이 21세기의 전략적 모델로 사회적경제에 주목하는 것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큼니다. 하지만 나는, 유럽의 사회적경제를 높이 평가하면서도 우리는 달라야 한다고 봅니다. 사회 상황이 다르고 사회적경제에 대한 요구 또한 다르니, 당연히 우리의 사회적경제는 달라야 한다

고 봅니다.

유럽의 경우, 사회적경제는 산업구조의 전환에 따른 실업 문제, 시장의 세계화에 따른 복지국가의 위기 상황에서 '재'등장했습니다. 산업사회에서 정보화 사회로 향하는 산업구조의 대전환, 재정급부형 복지에서 서비스제공형 복지로 향하는 복지의 대전환 과정에서 사회적경제가 재등장했습니다. 더욱이 유럽은 《시민의 참여→새로운 경제조직의 구축→시민적 공공성의 확보→(지역)사회의 창출》이라는 선순환 구조의 확립을 위해 사회적경제를 숨은 파트너로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정치가 선도하는 듯 보이지만, 실은 시민과 사회적경제를 향해 정치가 내려와 있습니다.

이와 비교해 우리의 현실은 조금 다릅니다. 산업사회에서 정보화 사회로의 전환이 고용의 위기를 낳지만, 동시에 고용된 적이 없거나 고용되지 못한 이들의 생존(노동)이 당면 과제입니다. 재정급부형 복지에서 서비스제공형 복지로의 전환도 필요하지만, 그 이전에 급격한 저출산 고령화가 몰고 올 복지 수요에 대한 시급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더욱이 수많은 사회적경제조직들이 생겨났지만 아직 제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고, 정부 정치와의 관계에서도 아직은 독립적이지 못합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사회적경제는 고용의 위기와 동시에 생존(노동)의 위기, 복지 전환 이전에 복지 부재라는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아직은 그 체력이 미약합니다.

사회적경제는 어떤 사회 상황에 놓여 있느냐에 따라 그 의미와 역할을 달리합니다. 유럽과 같은 후기산업사회에서는 실업·사회적 배제·복지국가의 위기에 대응하는 역할이 강조됩니다. 개발도상의 사회에서는 식량의 안정적 공급, 교육·건강·복지·주택 등과 같은 기본적인 필요에 대응하는 역할이 강조됩니다. 전체주의적 요소가 아직 남아 있는 옛 사회주의 국가들에서는 시민 정신·민주주의·혁신적 기업가 정신을 제공하는 공급처로서 사회적경제가 주목받습니다.

이와 비교해 우리의 사회적경제는 좀 더 포괄적인 의미와 역할을 부여받습니다. 사회 곳곳에는 여전히 생활의 기본적 필요를 충족하지 못하는 이들이 있고,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산업의 구조조정에 따른 새로운 직장이 아니라 생존(노동) 그 자체입니다. 유럽만큼 복지체계를 갖추지 못한 채로 더 빠르게 고령화되어가는 우리에게, 시민에 의한 복지의 창출이 시급한 과제입니다.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종종 정책 동원으로 이용해온 우리 사회에서는, 사회적경제를 통한 더 많은 민주적 시민 의식과 자율성의 고양이가 필요합니다. 한마디로 우리 사회가 복합적이고 다중적인 과제를 안고 있는 만큼, 우리의

사회적경제는 좀 더 복합적이고 다중적이면서 근본적인 필요가 있는데, 우리는 아직 그런 사회적경제를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2. 내가 꿈꾸는 사회적경제에 대한 몇 가지 단상

(1) 사회적경제의 출발 : 한 인간으로서 자유롭게 상상하고 이야기하기

‘근본적(radical)’이라는 것은 ‘급진적’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생각이 근본적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실천이 ‘통합적(integrated)’이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생각이 근본적이라고 해서 그 실천이 급진적이어서는, 또 그 실천이 통합적이라고 해서 그 생각마저 중도적이어서는, 해방을 향한 꿈은 현실이 아닌 공상이 되어버립니다.

근본적 생각은 칸트가 이야기한 ‘상상’, 즉 감성과 오성의 뿌리이면서 동시에 이 둘을 종합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끄집어내, 이를 다시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연결짓는 것이 ‘상상’입니다. 이런 ‘상상’을 니체는, 자신을 포획한 사슬을 끊고 ‘동일한 자아로 (영원히) 회귀’하는 것, 즉 “내가 있었던 곳으로 내가 돌아가는” 것이라고 무시무시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마르크스의 ‘변증법적 지양’은 이런 상상이 단지 앞으로만 향하고, 그 방식이 부정에만 의존하며, 따라서 폭력을 정당화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상상’의 우리식 표현이 바로 ‘원시반본(原始反本)’입니다. ‘원시반본’은 옛날로 돌아가자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었던 본래의 뿌리에서 앞으로의 진로를 찾자는 것입니다. 원불교를 창건한 소태산 박중빈 선생은 “원시반본하는 세상을 따르는 회상(상상)”을 통해 큰 깨달음을 얻었고, 그 첫 실천으로 ‘저축조합’(협동조합)과 ‘방언공사’(지역공동체운동)를 펼쳤습니다. 물질이 개벽했으니 이제는 정신을 개벽할 때가 왔다고, 경제적 토대가 마련되었으니 이제는 인간이 본격 등장할 때라고 했습니다.

니체의 ‘영원회귀’나 박중빈의 ‘개벽’을 비의(秘儀)로 이해해서는 곤란합니다. 이를 종교나 반이성으로 여기고 여기서 벗어나는 것이 마치 인간 해방인 양 이야기하지만, 이

런 근대성이야말로 지금의 자본주의 세계를 낳았고, 그 결과로 인간과 그 관계(=사회)는 오히려 더 큰 미신(=자본)과 반이성(=권력)의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와 비교해 그분들의 이야기는 ‘한 인간’이 비로소 인류 역사의 참 주인으로 등장한다는 선언입니다. 이런 한 인간의 자유롭고 자발적인 ‘결사’가 이제까지의 인류 역사가 통째로 바꿀 거라는 전망입니다.

내가 꿈꾸는 사회적경제의 첫 번째 모습은, 이런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념과 이성의 포획된 사슬을 끊고 자유롭게 상상하는 것입니다. 각자가 상상하는 것을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속에서, 사회 전체를 바꿔낼 해방적 비전을 끄집어내는 것입니다. 그 정도의 깊이 가지고 이제는 사회적경제를 상상하고 이야기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2) 사회적경제의 지향과 전략 : 자기 위치에서 모두를 담아내고 연대하기

몇 해 전 유럽 사회적경제의 대가인 자끄 드푸르니 교수의 강의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는 유럽의 사회적경제에 대해 매우 다양하고 풍부한 경험을 소개하면서, 사회적경제의 필요성을 “보다 근본적이고 다른 수준에서 경제적 다원주의를 보증하거나 강화할 수 있는 주요한 매개물”이라고 설파했습니다.

옳은 말이지만, 반쪽짜리 옳은 말입니다. 그의 ‘경제적 다원주의’ 주장은 지금의 유럽, 특히 시민사회의 합리성이 확보된 속에서나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사회적경제가 ‘삼분정립(三分鼎立)’—사회적으로는 시민사회·민주제 정치·자본제 시장, 경제적으로는 사회적경제·국가경제·시장경제의 정립—의 한 주체이면서 매개라는 그의 주장은, 시민사회가 국가나 자본에 휘둘리고 따라서 국가-시장-가정을 합리적으로 매개(연계)하기 어려운 사회에서는 먼발치 이야기입니다. 이런 사회에서 ‘경제적 다원주의’ 운운하는 것은, 사회적경제를 자본이 동여매는 수천 가지 거미줄에 종속시키거나(레닌), 국가의 하부기관으로 전락시킬 뿐입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큰 문제는, 그의 주장을 단지 경제적 다원주의로만 이해하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경제를 “복수의 경제원리가 혼합된 경제적 다원주의의 하나”(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로만 이해하는 데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말하고자 했던

핵심은 사실 ‘경제적 다원주의’가 아니라, ‘보다 근본적이고 다른 수준에서’입니다. ‘경제적 다원주의’는 ‘보다 근본적이고 다른 수준’을 향해가는 사회적경제의 성과 가운데 하나일 뿐이지 그 자체가 지향이 아닙니다. 사회적경제의 지향은 ‘국가와 시장의 경계에서’(일자리위원회) 국가경제와 시장경제를 매개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사회를 창출하는 데 있고, 그 성과의 하나로서 경제적 다원주의가 드러날 뿐입니다.

한 인간과 그들의 사회적경제는 사회 전체로 보면 ‘부분’이지만, 동시에 개개로 보면 ‘전체’입니다. 따라서 (전체에 대해서는) ‘다원성(多元性)’을 담아내면서 동시에 (개체에 대해서는) ‘전일성(全一性)’을 담아내야 하고, 이를 통해 ‘매개’인 동시에 ‘주체’로서 자리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경제적 다원주의의 하나’가 아니라 내부적으로는 전일적 개체를 지향하면서, 외부적으로는 이런 지향을 담은 개체들이 더 큰 차원—가령 지역사회 차원 같은—에서 다원적 개체로 연대해야 합니다.

“재분배는 국가경제의 몫이고, 상품교환은 시장경제의 몫이며, 호혜야말로 사회적경제의 몫”(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이라는 주장은 ‘경제 행위의 다원성’—재분배·상품교환·호혜—을 ‘경제의 다원주의’—국가경제·시장경제·사회적경제—로 둔갑시킨 철 지난 체제론이고 기능주의일 뿐입니다. 사회적경제의 지향은, (우리 안에서) 호혜를 기반으로 상품교환을 해왔던 기존의 성과를 바탕으로 이제는 (우리 밖을 향해) 재분배를 행하는 것입니다. 사회적경제의 전략은,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호혜·상품교환·재분배를 통일시켜가는 이런 사회적경제조직들이 더 큰 (지역)사회를 향해 연대하자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모든 인간을 살리고, 진정한 인간의 사회를 만들어가자는 것입니다.

이를 두고 고려말 이암은 “하나를 잡지만 그 안에 셋을 담고(執一而含三), 이런 셋을 모아 (다시) 하나로 돌아간다(會三而歸一)”고 했습니다. 내가 꿈꾸는 사회적경제의 두 번째 모습은, 한 인간과 그들의 사회적경제조직이 철 지난 체제론과 기능주의를 넘어 하나의 완성된 개체로 끊임없이 나아가는 것이고, 이런 실천들이 지역 차원에서 모여 한 인간을 살려내고 사회 전체를 바꾸는 해방적 연대를 모색하는 것입니다. 그 정도의 열망을 가지고 이제는 사회적경제를 실천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3) 사회적경제의 역사와 목적 : 소외를 극복하면서 자연으로 회귀하기

뜻 있는 사회적경제 활동가분들로부터 자주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회적 경제는 국가나 자본의 시녀가 아니다”라는 말이고, 다른 하나는 “사회적경제는 인간의 소외를 극복하기 위함이다”는 말입니다. 전자가 사회적경제의 현실을 안타까워한 것이 라면, 후자는 사회적경제의 목적을 이야기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사회적경제가 국가나 자본의 시녀가 되지 않으려면, 사회적경제의 역사와 목적을 국가나 자본이 정해준 것과는 다르게 봐야 합니다. 사회적경제의 역사를 고작 19세기 이후, 즉 국가와 자본이 결합해 인간과 사회를 소외시킨 데서만 찾아서는 태생적으로 그들의 시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적경제의 목적을 고작 국가가 해야 하는 ‘공익(公益)’과 기업이 해야 하는 ‘사회적 가치’의 추구로만 보아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국가나 자본에 포획되지 않는 사회적경제 고유의 역사를 찾아야 하고, 이를 기반으로 그들이 정한 수준을 넘어서는 고유의 목적을 찾아야 합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국가는 본래 사회의 대외적 표출이었고, 자본은 본래 사회의 내부적 동력이었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자연에 ‘묻혀 있던(embedded)’(폴라니) 인간의 무리들 ‘사이’에서 사회를 태동시키면서 시작되었고, 이를 가능하게 한 것이 자본의 도움이었으며, 국가는 이런 사회가 대외적으로 드러낼 때나 존재했습니다. 중국과의 대외적 관계에서나 신시(神市) 사회가 ‘(고)조선’으로 소도(蘇塗) 사회가 ‘마한’으로 드러났지, 신시와 소도의 사람들이 자신을 조선인·마한인이라 여기지 않았습니니다.

‘소외’란 바로 이런 사회·국가·자본의 관계가 전도되면서 생긴 말입니다. 즉, 사회의 대외적 표출인 국가가 그 사회 내부를 지배하게 되고, 이를 다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해온 자본이 ‘생명집적’에서 ‘화폐집적’으로 변모해 지배하게 되면서 생긴 말입니다. 19세기 이후에 ‘소외’가 사회적경제의 중요한 화두로 등장한 것은, 이 시기에 이르러 비로소 전도된 사회·국가·자본의 관계가 지배-피지배 관계가 고착화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런 지배-피지배 관계를 ‘묻혀 있던’ 상태로 되돌리는 것이, 즉 ‘원시공산제사회’로 돌아가는 것이 대안일 수 없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자연으로부터 ‘떨어져나온(disembedded)’ 덕에 시작되었고, 자연에서 떨어져 나왔지만 자연으로 회귀하려는 인간의 노력—여기에 사회적경제의 원류가 있습니다—이 인류의 가역적(可逆的) 삶, 즉 시쳇말로 지속가능한 사회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국가나 자본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나 자본이 사회로부터 떨어져나왔지만, 이런 국가나 자본을 다시 사회로 회귀시키려는 인간의 노력—이때부터 사회적경제가 시작되었습니다—이 그들의 삶

을 지속가능하게 합니다.

물론 이때의 '회귀'는 묻혀 있던 상태로 되돌아가자는 것이 아니라, 지배-피지배의 관계를 재정립하자는 것입니다. 자연으로부터 떨어져나왔으면서도 자연을 지배하는 사회, 사회의 대외적 표출이었으면서도 사회를 지배하게 된 국가, 사회 형성에 기여했으면서도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자본의 '지배-피지배 관계'를 '공생의 관계'로 재정립하자는 것입니다. 문제의 핵심은 '떨어져나온(disembedded)'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고착화 즉 '돌출(disembeddedness)'에 있고, '외화(外化)'에 있는 것이 아니라 '특수한 외화' '자립한 외화'를 뜻하는 '소외'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가 이런 '소외의 과정'을 걸어왔다면, 사회적경제는 이를 '공생의 관계'로 재정립하자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사회적경제의 원형은 19세기 유럽에서 태동한 것이 아니라 (이름이야 어떻든) 인간이 사회를 형성하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20세기가 저물 때까지 한국사회에는 미처 ‘사회적경제’라는 이름표는 달지 않았으며, 사회적경제의 원리와 방식으로 추동되는 무수한 시도들이 있었”(「2018 사회적경제 보고서」)던 것도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한마디로 사회적경제의 역사는 인류의 역사와 그 궤를 같이하는 것이고, 따라서 인류가 사회를 형성하는 한 (이름이야 어떻든)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나아가 이런 사회적경제는 사회로부터 떨어져나온 국가나 자본을 다시 사회로 회귀시키는 데만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연으로부터 떨어져나온 인간과 사회가 다시 자연으로 회귀하자는 데 더 큰 목적이 있습니다. 아니, 어떤 면에서는 인간과 사회가 자연으로 회귀하는 과정에서 비로소 국가와 자본의 사회 회귀가 가능하다는 것이 사회적경제가 재등장하게 된 배경입니다. 그리고 이때에는 '소외' 대신에 '배제'라는 말을 씁니다. 국가나 자본으로부터의 소외를 극복하는 데만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이 배제해온 것들을 포섭하는 데, 사회 안에 자연을 담아내 사회를 자연으로 회귀하자는 데 더 큰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회적경제가 사회로부터 배제된 이들을 포섭하는 일에 매진하는 것은, 그들이야말로 자연의 표상이고 따라서 그들에 대한 포섭이 곧 자연으로의 회귀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실천을 굳이 〈이익〉이나 〈가치〉라는 말로 설명하자면, 불특정 다수를 위한 '공익(公益)'이 아니라 이방인을 환대하자는 '홍익(弘益)'이고,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의 동시적 추구를 넘어 '자연의 가치'를 추구하자는 것입니다.

내가 꿈꾸는 사회적경제의 세 번째 모습은, 《자연→사회→국가→자본》으로 향해온 소외의 역사를 《자연←사회←국가←자본》으로 회귀하려는 인류의 비원(悲願)을 담은 것이고, 이를 위해 ‘공익’과 ‘사회적 가치’의 추구를 넘어 한 사람 한 사람을 생명의 본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자는 것입니다. 이런 정도의 서원(誓願)을 가지고 이제는 사회적경제를 구상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3. 맺음말 : 사회적 포섭운동으로서의 사회적경제를 향해

내가 꿈꾸는 사회적경제는 한마디로 사회 영역에서의 사회적 포섭운동입니다. 한쪽에서는 자신을 소외시켜온(배제해온) 국가나 자본을 포섭하자는 것이고, 다른 한쪽에서는 자신이 소외시켜온(배제해온) 자연을 포섭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둘 사이의 관계는, 자연에 대한 사회적 포섭이 있음으로써 비로소 국가와 자본의 사회적 포섭이 가능합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사회적경제는, 협동조합·자활·사회적기업 등의 역사를 잇지만 동시에 크게 차원변화한 사회운동입니다. 아니, 이런 운동들을 일으켰던 분들의 숨은 취지를 처음으로 전면으로 드러낸 것입니다.

‘사회’의 순우리말이 ‘나라(國)’입니다. 나라(國)는 결코 국가가 아닙니다. 동아시아에서 ‘국(國)’이 붙은 것은 모두 ‘(지역)사회(communitiy)’를 가리켰고, 국가 이름에는 오히려 ‘국(國)’자가 붙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회(communitiy)’가 무너져가자 다시 이를 세우려 생겨난 것이 ‘사회적(social)’ 실천이고, 그 주체가 바로 ‘사회적 인간(socialist)’입니다. 유럽의 ‘사회민주주의(social democracy)’는 실은 이런 사회적 실천을 ‘폭력적’이 아닌 ‘평화적’으로 행하자는 것이었고, 따라서 그들의 전략은 ‘국가정책’이 아닌 ‘나라살림계획’이었습니다.

통일신라 때 최치원 선생은 우리 나라(사회)에 ‘현묘한 도(玄妙之道)’가 있으니 이를 ‘풍류(風流)’라 하고, 그 무리를 ‘나라의 선인(國仙)’이라 한다고 했습니다. ‘풍류’하면 보통은 놀이로 폄훼하지만, 실은 자연의 숨결(風)과 흐름(流)에 따르는 실천입니다. 요즘 말로 치면 ‘풍류’는 ‘사회적경제’이고, ‘선인’은 그 주체인 ‘사회적 인간’이었던 셈입니다.

나아가 최치원은 ‘풍류’의 모든 가르침이 ‘선사(仙史)’에 있는데, 한마디로 표현하면

‘포함삼교(包涵三教)’와 ‘접화군생(接化群生)’이라 했습니다. 여기서 ‘선사’는 우리 역사에서 최초로 사회를 형성한 신시(神市) 이래로 이어져 온, 요즘 말로 치면 일종의 사회운동 교본입니다. 그리고 그 핵심 내용이 ‘포함삼교’와 ‘접화군생’이라 함은, 서로 다른 입장과 방식을 내 안에 통일시키고, 이렇게 통일되어가는 전체적 개체들이 서로 융합해 못 생명과 그 관계를 살리자는 것입니다.

세상 어느 나라(사회)에 이와 견줄만한 사회운동 철학과 사회적경제 전략이 있었겠습니까? 내가 꿈꾸는 우리 시대의 사회적경제는, 이런 유구한 사회운동의 역사 속에서 자신을 발견하고, 나에게 대한 절대적 긍정과 동료와의 상호적 결사를 바탕으로 이방인을 환대하는, 즉 《자애(自愛)드우애(友愛)드형제애(兄弟愛)》를 통해 《사익(私益)드공익(公益)드홍익(弘益)》으로 나아가는 것이며, 이를 통해 무너진 (지역)사회를 재창조하자는 것입니다.

미천한 내 꿈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심과 살림으로 협동하고 연대한다

한살림제주 상무이사 강 순 원

모심과 살림으로 협동하고 연대한다

한살림제주의 사회적경제활동 경험을 중심으로

강순원 한살림제주 상무이사

1

우리는 무엇을 목표로 활동을 하는가?

목표를 이루기 위한 전략은 무엇인가?

현실에서 부딪히는 애로사항/한계 상황은 무엇인가?

그것을 돌파하기 위한 제안/과제는 무엇인가?

2

1. 한살림제주의 사회적경제활동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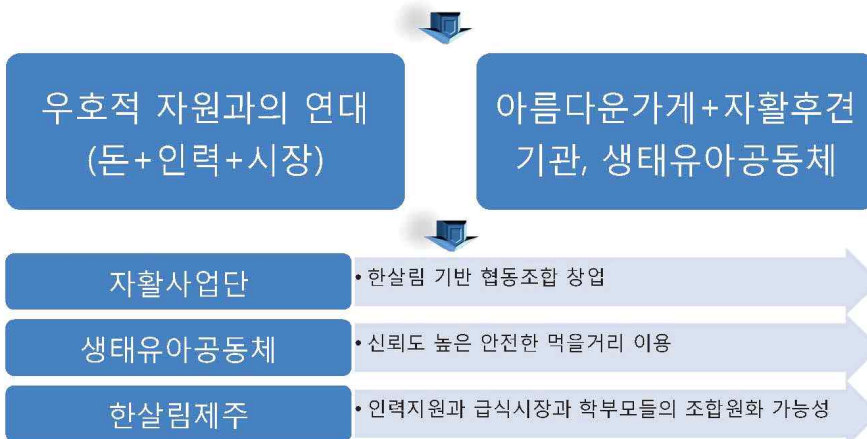
사회적경제와 연대를 시작하던 시기의 상황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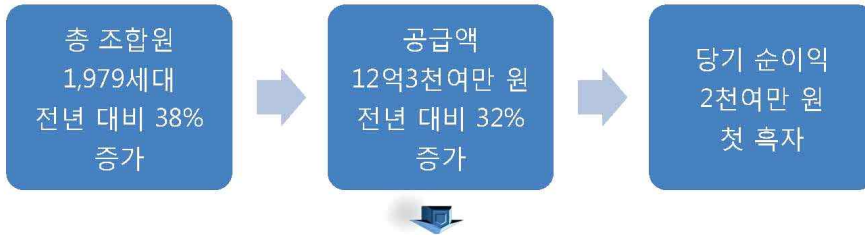
문제해결을 위한 모색(2012년 3월부터)

사람/돈/비전 부재 상황에서 사업과 활동 활력 어떻게?



4

2012년 결산 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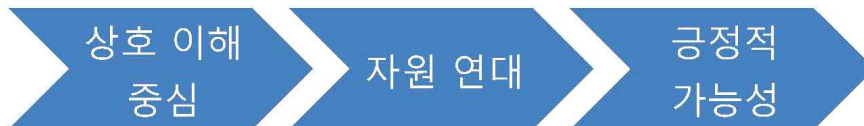


주요 성과 요인 분석

- 외부 환경 : 후쿠시마원전 사고, 제주 이주분 본격화
- 내부 요인 : 주변 자원과의 연대, 이사회 및 상근자들 문제해결에 대한 의지

5

2012년 결산 성과를 통한 협동과 연대 주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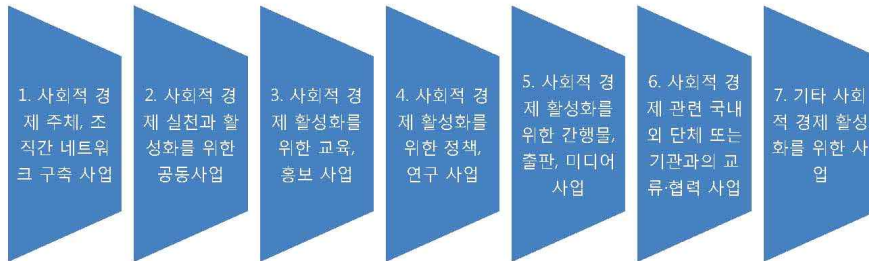


6

2. 한살림제주 사회적경제 활동과 성과

협동과 연대에 기초한 사회적경제 연대조직 제안

2013년 4월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및 센터 등 당사자조직 협의체와 개별 법인 및 개인, 단체 등 자립과 연대의 공동체를 목표로 공식 출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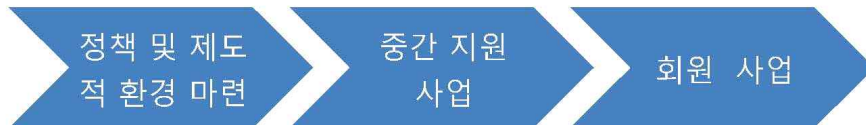


7

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위상과 활동

정체성

제주지역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선도하고자 하는 당사자조직과 개인, 단체들의 연대체로서 사회적경제 주체들간 협동과 연대, 정부와 지자체의 민간 파트너를 자임함



8

한살림제주의 역할

협동과 연대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조직체 건설을 주도적으로 제안하고
조직체 창립 이후 2018년까지 6년 동안 상임대표 단체로 역할



'스토어36.5'제주점의 안테나숍 운영을 통해 사회적경제 제품 판로 지원

상호이해에 기초한 연대 방식의 확대 노력

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운영 지원

9

한살림제주의 역할(사회적경제 활동 산출지표)

점검항목	목표	2017년 실적(A)	2018년 목표(B)	2018년 실적(C)	증가율 C/A	달성율 C/B	
사회적 경제 연대 기구	기구 수(5개 단체)	7	5	8	14.3%	160%	
	회의 활동	사회적경제네트워크(월 6회)	82	72	112	36.6%	155.6%
		에너지전환협동조합	-	-	10	-	-
		로컬푸드협의회	-	6	9	-	150%
		제주희망협동조합(월 1회)	5	12	7	40%	58.3%
		생협협의회(월 0.3회)	9	3.6	4	-55.6%	111.1%
		치과신협(월 0.3회)	-	3.6	-	-	-
		주차대책위	15	-	8	-46.7%	-
		급식연대(월 0.5회)	7	6	5	-28.6%	83.3%
회의 개최건수 합계(월8.1회)	119	110	155	30.3%	140.7%		
제주도 관련 위원회	사회적경제위원회(월 1.25회)	24	11.25	10	-58.3%	88.9%	
	일자리창출위원회(월 0.5회)	9	3.75	2	-77.8%	53.3%	
	기타	12	3.5	3	-75%	85.7%	
	회의 개최건수 합계(월1.75회)	45	18.5	15	-66.7%	81.1%	
한살림제주 사회적경제위원회	구성되지 못함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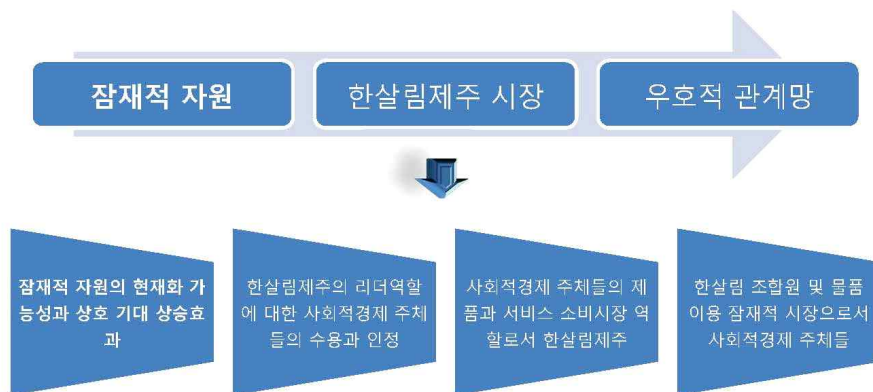
한살림제주의 역할(사회적경제 활동 성과지표)

점검항목	목표	2017년실적 (A)	2018 년목표	2018년실적 (C)	증가율 C/A
사회적경제 연대기구	취급 안건 수	지표관리 되지 않음			
	안건 실행 수				
상 호 거 래 (제주희망, 보금자리, 치과신협)	1. 예금(천원)	2,611,134	0	2,736,524	5%
	2. 지출총계(천원)	101,664	0	93,287	-8%
	지급수수료(천원)	96,229	0	87,980	-9%
	회비 및 후원금 (네트워크/급식/MOU)(천원)	5,435	0	5,307	-2%
	3. 수입총계 (천원,물품이용,지원사업)	82,247	0	83,083	1%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교육사업	?	0	(12,000)	-
	네트워크 이용액	1,047	0	781	-25%
	MOU단체 이용액	81,199	0	70,257	-13%
	치과신협 이용액		-	-	-
	4.한살림+스토어 이용액		-	-	-
판로지원	스토어 매출액(천원)	32,010		31,461	-1.72

11

3. 한살림운동과 사회적경제의 관계, 그리고 과제

한살림제주의 자원과 발현 과정



12

협동조합으로서 한살림제주의 운영 개선과 사회적 활동

운영
개선

사업 및 활동, 조직 운용의 개방적 상향식 의사결정 구조 전환

제도개선특위와 일터살림협의회를 통한 공식적 지속적 제도/일터환경 개선작업

사회적회계 도입을 통한 사회적경제 방식의 사업 및 활동 성과지표 관리

업무담당자와 동료·인사위원회 합의에 의한 직무가치부여와 직무급 체계 도입

외부

사회적경제 연대와 정책·거버넌스

사회적경제 주체들과
협업

시민사회와 공동사업
등 통한 지역사회 기여
및 신뢰도 제고

13

한살림의 모심과 살림, 그리고 사회적경제 운동

모심

- 인격, 비인격, 생명, 비생명을 막론하고 부모를 대하듯 공경하면서, 동시에 수평적으로 사귀고 함께 창조적 작업을 함께 하는 것으로 모심의 윤리적 해명이면서 창조적 파트너십에 대한 해명

살림

- 모심(侍-시) 다음에 오는 명제로, 삶과 죽음의 대립에 토대를 두지 않고 삶과 죽음을 포괄하는 생명과 그 생명을 인위적으로 억압, 착취, 간섭, 오염, 파괴, 무시, 살해하는 '죽임'에 대한 대응 개념이자 극복운동
- 생명운동·생태운동·녹색운동·환경운동·생협운동의 기본 개념

14

다시, 밥 : 세상에 밥이 되는 한살림의 재성찰

환경 : 사람이 자연의 밥이 되고

사회 : 자신을 낮추어 다른 이를 살리고

경제 : 생산자와 소비자가 서로 밥이 되어 서로를 책임지고자 함

한살림의 지속가능성과 사회적경제에서의 역할

모심과 살림의
가치와 책임감

한살림
시장과 경험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기여

15



꿈은 이루어 지고 있을까

(주)즐거운밥상 대표 **박 찬 무**



사회적기업 (주)즐거운밥상 대표
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 이사장

박 찬 무



꿈은 이뤄지고 있을까?

- 변혁운동을 자활(사회적경제영역)에서는 평생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 내 얘기를 들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항상 주변에 있었기 때문에(동료)
- 나는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자만을 바탕으로
- 20년 가까운 사경활동 경력으로 지역 사회적경제의 리더라고 여겨지곤 있지만
-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 낮아져 가는 열정, 감퇴하는 기억력, 안 좋아지는 건강상태



즐거운 밥상의 연혁

쌍용중, 천안북중
위탁급식납품



- 2005년 2월 시장진입형 자활근로로 시작
- 2005년 4월 지역의 결식아동 도시락 위탁 수행
- 2009년 12월 동남구 원성2교길29로 이전(약200 m²)
- 2010년 11월 충남형 사회적기업 제1호로 지정
- 2011년 전안시와 결식아동 도시락 10억 위탁계약
- 2012년 09월 고용노동부사회적기업 인증
- 2013년 충남 우수사회적기업 지정
- 2015년 보건복지부 베스트자활기업 선정
- 2017년 쌍용중, 천안북중 위탁급식납품
- 2018년 1500명 뷔페
- 2019년 반찬세트(시청, 구청, 아파트단지)



2005년 33m²



2007년 132m²



2010년 208m²



2018년 462m²





기업의 매출 변화추이



년도	매출액(천원)	년도	매출액(천원)
2007	230,506	2012	1,481,748
2008	286,518	2013	1,670,714
2009	475,661	2014	1,600,000
2010	532,600	2015	1,600,000
2011	1,088,000	2016	1,600,000
		2017,8	1,600,000



업력이 15년이 되다 보니
이런저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내부의 위기 (타산지석으로)

2005 자리잡기

2008 매출반토막

2012 쓰레기도시락

2014 경영위기



외부의 위기

2016 정치인들의 논공행상

2017 HACCP 인증

2018 도약 또는 빛 더미

2019 노인급식 표적감사

위기극복의 노력



학습으로 배워지는 것과 시간으로부터 배우는 것에는 차이가 있다. 아직도 우리는 진행형

같은지향

- 사회적경제학습
- 정세토론
- 협동조합공부
- 인성교육진행
- 조리교육

함께 주인

- 조발특위
- 주1회집행부
- 월1회전체회의
- 년2회평가웍샵
- 신메뉴개발노력

지역과 호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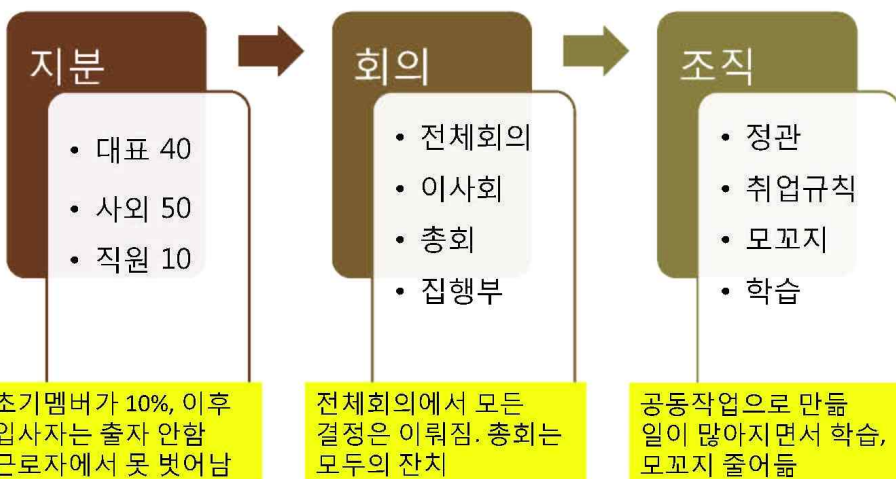
- 다양한지역단체와 연대
- 지역이 보호->위탁 운영여론형성
- 언론에노출



안 망하고 아직까지 있는 이유에 대해 생각해 봤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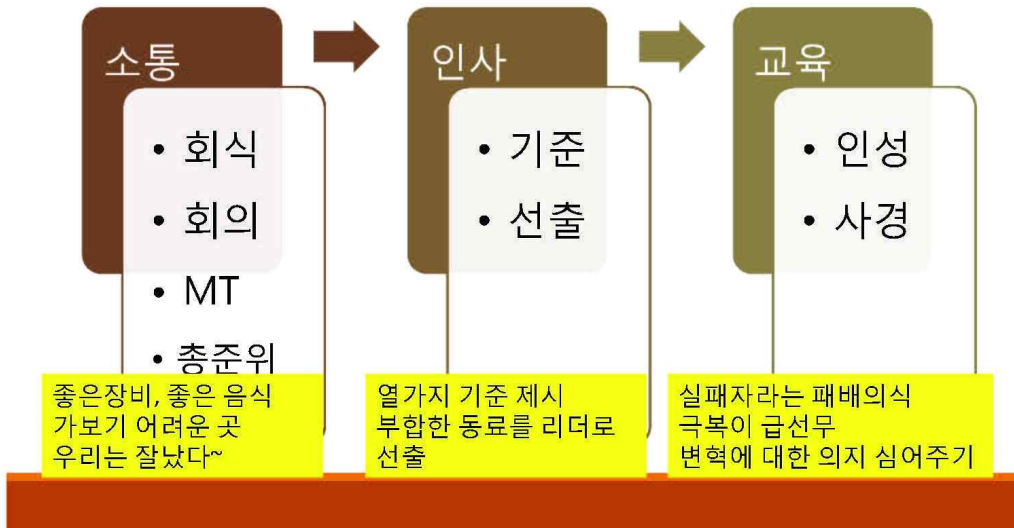


* 노동자 경영통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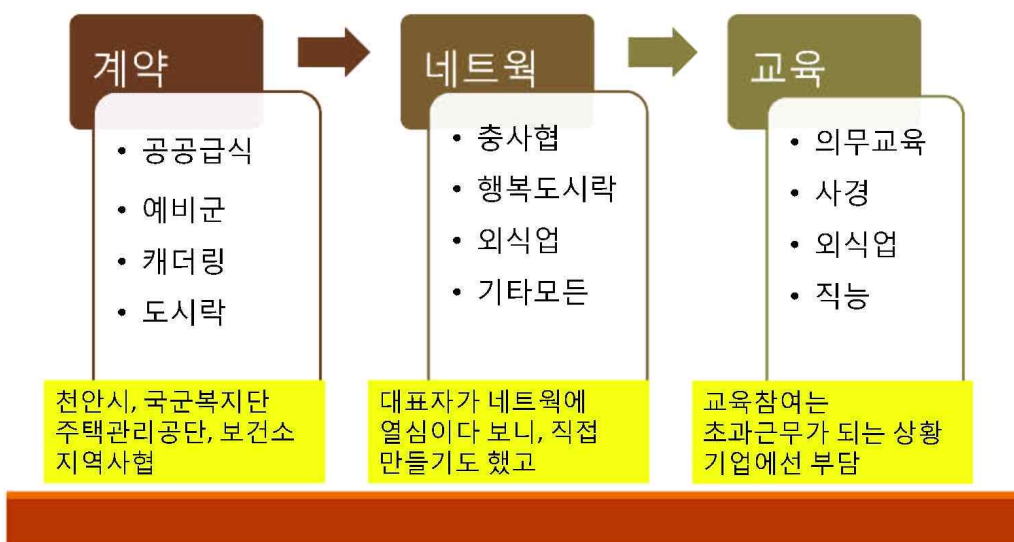




* 몇 가지 재미있는 실험



* 지역사회와 협동1





* 지역사회와 협동2



세월호
도보행진



갑을오토텍
유성지회



몇 가지 잘 하고 싶었던 것

- 봄마다 보약
- 5년, 10년 안식월
- 생일 때 케익과 상품권(가족모두)
- 아웃도어 제공
- 가는 사람 잡지 않고 오는 사람 막지 않음



자본가와 노동자는
애초부터 적대적?



그래서 여러분께 질문을 하게 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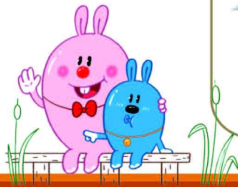
우리는 어떤 것이 부족했으며 무엇을 더 해야 할까요?
저는 이제 은퇴해도 되지 않을까요?



좋은 생각 있으시면 요기로
연락 부탁~



즐거움밥상 : 041-558-0615
박 찬 무 : 010-3238-9134
coldmoo72@gmail.com



CNSE 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
Chungnam Social Economy Network

<http://www.sechungnam.org/>



대전사회적경제 혁신플랫폼 실험

사회적경제연구원 소셜경영연구소 소장 **조 세 중**

대전 사회적경제 혁신플랫폼 실험

사회적경제연구원 소셜경영연구소 소장 조 세 종

민간의 지역사회 순환형 모델 수립

대전에서는 2015년도에 사회적경제 민간성장전략을 사회적기업가들과 전문가들이 모여 수립하였다. 사회적경제는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일치된 의견이었으며, 어느 광역시도보다 빠르게 진행되는 수도권으로의 자본역외유출을 막기 위하여 사회적경제의 호혜시장 형성, 지역순환의 내발적 성장, 그리고 자조직이고 자립적인 경제기반을 핵심과제로 잡았다.

이를 실천할 역량있는 사회적경제 그룹을 비영리협동조합 연대(구, 생협연대) 조직이라고 보았는데 비영리협동조합 연대는 한살림대전, 한밭아이쿱, 대전아이쿱, 품앗이, 그리고 민들레의료사협 등이 가입되었으며 협동조합기본법 이전에는 모두 생협이었으며 민들레가 협동조합기본법이 제정 후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되었다. 함께 연대하여 우리 쌀 지키기, GMO반대 등 건강한 먹거리와 더불어 보건예방활동을 지역에서 전개하였다. 그리고 2015년 ‘로컬푸드법’의 통과와 함께 친환경로컬푸드의 가치를 내걸고 품앗이생협이 활동하기 시작하였다.

2015년에 민간성장전략은 인프라 구축과 생애주기별 협동조합 설계라는 두 축으로 설계되었다. 인프라 구축은 로컬푸드 활성화로 지역물류 구축(유통), 사회적프로젝트와 사회성과에 맞춘 사회적 금융 및 기금 조성(금융), 지역순환과 사회적경제 수요창출을 위한 지역화폐(화폐), 보건의료와 사회서비스를 결합한 주민참여 의료서비스(의료), 지방권력 감시와 주민 소통을 위한 마을미디어(언론), 지역문화 네트워크 구축(문화) 등 6가지로 선정했고, 생애주기별 협동조합 수립계획은 영유아 단계에서 노년 단계까지 필요한

협동조합을 설립하여 지역사회의 자립과 공생의 순환모델을 만들어 보자는 취지였다.*

4년이 지난 현재의 시점에서 2015년에 민간이 세운 계획을 돌아보면 지역물류 구축이라는 유통영역과 주민참여 통합의료서비스라는 보건의료돌봄영역의 두 가지 인프라 구축이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유통과 보건의료 분야는 민간이 주체적으로 지역에 있는 자원이 결합된 민들레의료사협과 품앗이마을사회적협동조합이 있었고, 각자 도시수요자와 농촌공급자, 노인과 장애인 등 지역주민과 의료복지통합돌봄서비스 제공자 등을 연결하는 플랫폼을 만들고 이를 통해 새로운 수요와 공급을 확대하고 창출해 나가는 플랫폼 전략을 세울 수 있었다.

커뮤니티케어 혁신 플랫폼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이하 민들레)은 2002년 의원, 한의원, 치과의원을 개설한 이래 조합원과 지역주민을 위해 보건예방활동을 전개해 나갔으며, 이에 대한 성과를 인정받아 2012년 우수 사회적기업 대통령표창, 2015년 우수 협동조합 부총리표창 등을 수여받았으나 보건예방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은 민들레의 적자를 지속적으로 증가시켰다.

민들레는 보험수가에 적용되지 않는 보건예방활동을 확대하면서도 건전한 재정구조를 확보하기 위해 공익적 기금을 통한 프로젝트 활동을 시작하였다. 2016년에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위한 플랫폼’을 주제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프로젝트에 선정된 것으로, ‘주민참여 건강증진플랫폼’, 그리고 커뮤니티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커뮤니티케어’ 사업에 선정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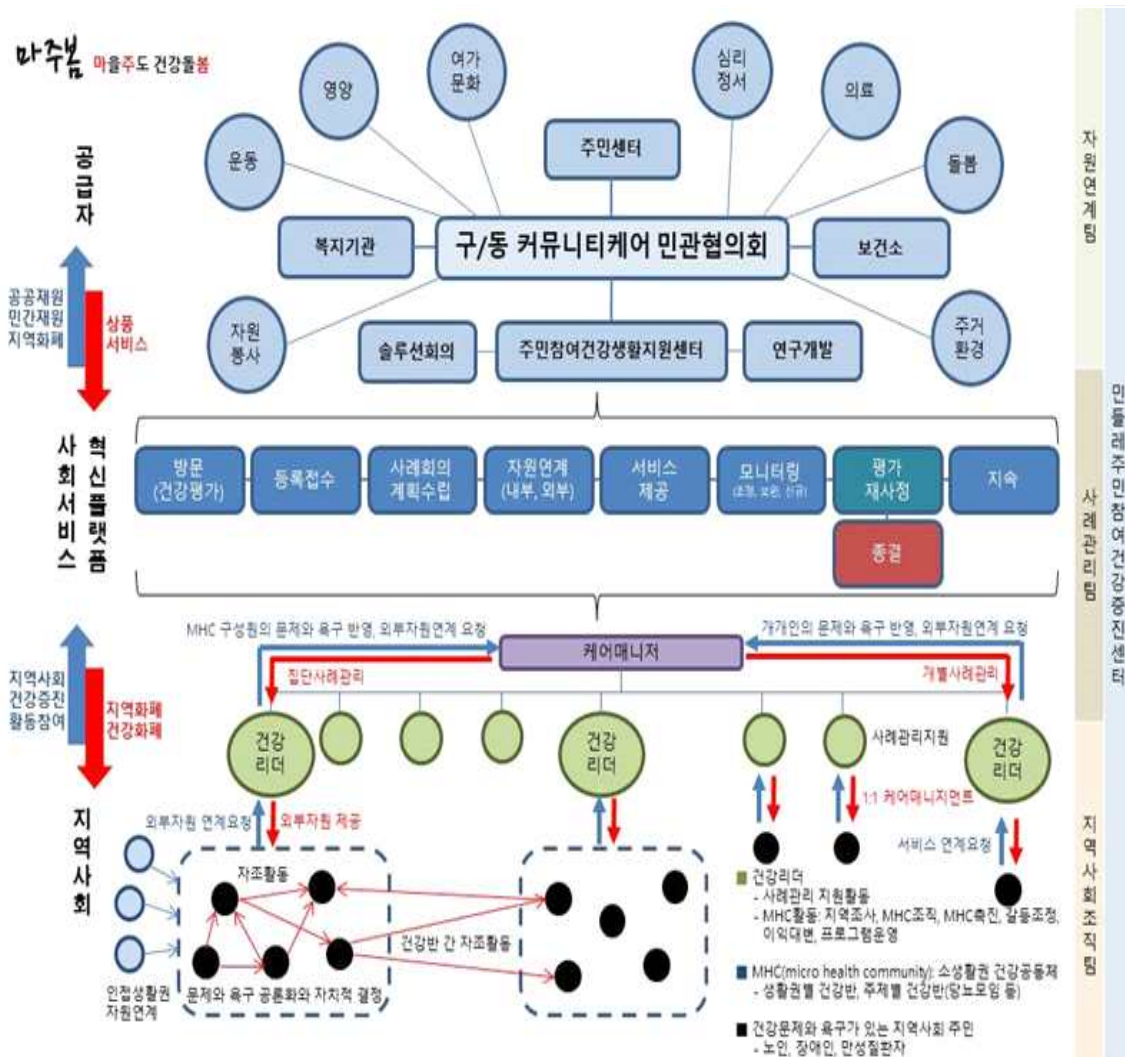
〈표 1〉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위한 플랫폼 형성과정

사업기간	사업명	목적 및 내용	주관기관
2016~2018	맞춤형 지역 사회 통합돌봄	통합돌봄 사례관리, 지역주민 스스로 돌봄, 방문 진료, 건강자조모임, 건강화폐	사회복지공동 모 금회
2017	주민참여 건강증진 플랫폼	플랫폼 매뉴얼 구축, 운동 심리 위생 의료 식생활 예방 봉사 IT지원 문화 등 연계기관 참여	한국사회적 기 업진흥원
2018~2019	커뮤니티 케어	주민공동체, 케어매니지먼트 체계운영, 사회적경제기업 건강자원 연계, ICT통합 솔루션개발	산업통상 자 원부

* 「대전사회적경제 민간성장전략 5개년 계획」, 조세중, 이원호, 김성훈 공저, 대전사회적경제연구원, 2015.12.

이와 같은 프로젝트들은 지역사회 통합돌봄이라는 일관된 주제로 민들레가 주민과 의료 복지기관 및 사회적경제조직과 연대하는 사업역량을 키웠으며, 현재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업통상자원부의 프로젝트에서는 민들레, 사회적경제연구원(사협), 세상속의과학(협), 충남대 간호대가 협업을 통해 모델을 만들고, 대전지역 40개 사회적경제 기업이 수요자에 맞춤형의 서비스와 상품을 제공하면서 경영혁신과 표준화를 촉진한다.

〈그림 1〉 커뮤니티케어 혁신플랫폼 개념도



대전형 커뮤니티케어는 통합돌봄 플랫폼이 주민들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의 사회적경제 조직에 의해 구성되었다는 것이 특징이다.

첫째, 사회적경제 조직은 의료, 돌봄, 주거환경 등 건강관련 서비스를 8개의 범주로 묶어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공급자의 역할을 하며, 수요자 맞춤을 위한 공급자간 컨서시엄, 인력양성, 그리고 범주별 네트워크 등을 조직화한다.

둘째, 민들레는 혁신플랫폼을 담당하고 이용자 중심의 케어매니지먼트를 개발 운영한다. 건강사정과 건강자원연계, 통합사례관리 등 포괄적 관리체계와 ICT통합 솔루션 활용하여 지역의 건강증진활동을 돕는다.

셋째, 지역사회는 다양한 주민건강 소공동체를 형성하여 전체 주민이 보편적인 접근성을 확보하도록 하며, 자가건강능력 향상 등 수요자인 지역주민 활동을 중심으로 하고 사회적 관계망을 확대해 나간다. 현재 참여하고 있는 주민 수는 집중관리군을 합쳐 400명에 이르고 있다.

무엇보다도 사회적경제기업이 커뮤니티케어 사업을 통해 상품과 서비스의 양과 질을 확대하고 개선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며 이를 위해 컨설팅, 업종별 네트워크, 컨서시엄 형성 등 사회적경제 기업들의 역량을 향상시켜, 수요자인 지역주민들의 요구에 대응해 나가야 한다. 사회적경제 기업은 이러한 지역주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방식으로 수요를 확장시키는 것이 커뮤니티케어의 사회적가치를 높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시용서비스가 제공되는 사업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지속적인 자부담 사용이 연계되도록 ICT기반의 플랫폼이 제공될 것이다. 궁극적으로 기존의 보건의료와 복지서비스의 전달체계가 분절되고 단편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회적경제기업들은 8대 범주의 서비스 공급 체계를 갖추어야 하고 지역의 복지영역과 보건행정과도 협력해 나가야 한다.

로컬푸드 플랫폼과 푸드플랜

2012년에 설립된 품앗이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순환과 공생의 지역사회를 기치로 대전의 시민사회, 사회적경제, 마을공동체, 노동단체 구성원들이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설립하였다. 품앗이생활협은 로컬푸드운동을 공론화하며 소비자를 조직하고 초기 비즈니스를 거점공동체 공급방식으로 전개하였으나 확장성에 한계가 있었다.

2014년 친환경로컬푸드 직매장공급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물류와 유통을 전문화하는 사회적협동조합 품앗이마을이 품앗이생협에서 분리되고 매장과 마을커뮤니티가 결합되는 관계시장의 로컬푸드 유통플랫폼이 본격적으로 도입되었다.** 현재 유통플랫폼 수행 결과, 대전지역에 로컬푸드 직영직매장 4곳, 협력직매장 1곳, 대전과 충남북지역 농촌 200여 농가 조직과 1만3천명의 조합원, 제휴매장 5곳, 워커즈 6곳, 유성과 대덕구에 교육, 언론, 건강 등 100여개의 마을공동체 네트워크를 구성하게 되었다.

아래의 그림은 품앗이협동조합 전체의 현황을 나타낸 것으로, 지역산업 생태계 구축을 담당하고 있는 품앗이마을 사회적협동조합과 마을공동체 생태계 구축을 담당하고 있는 품앗이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역할을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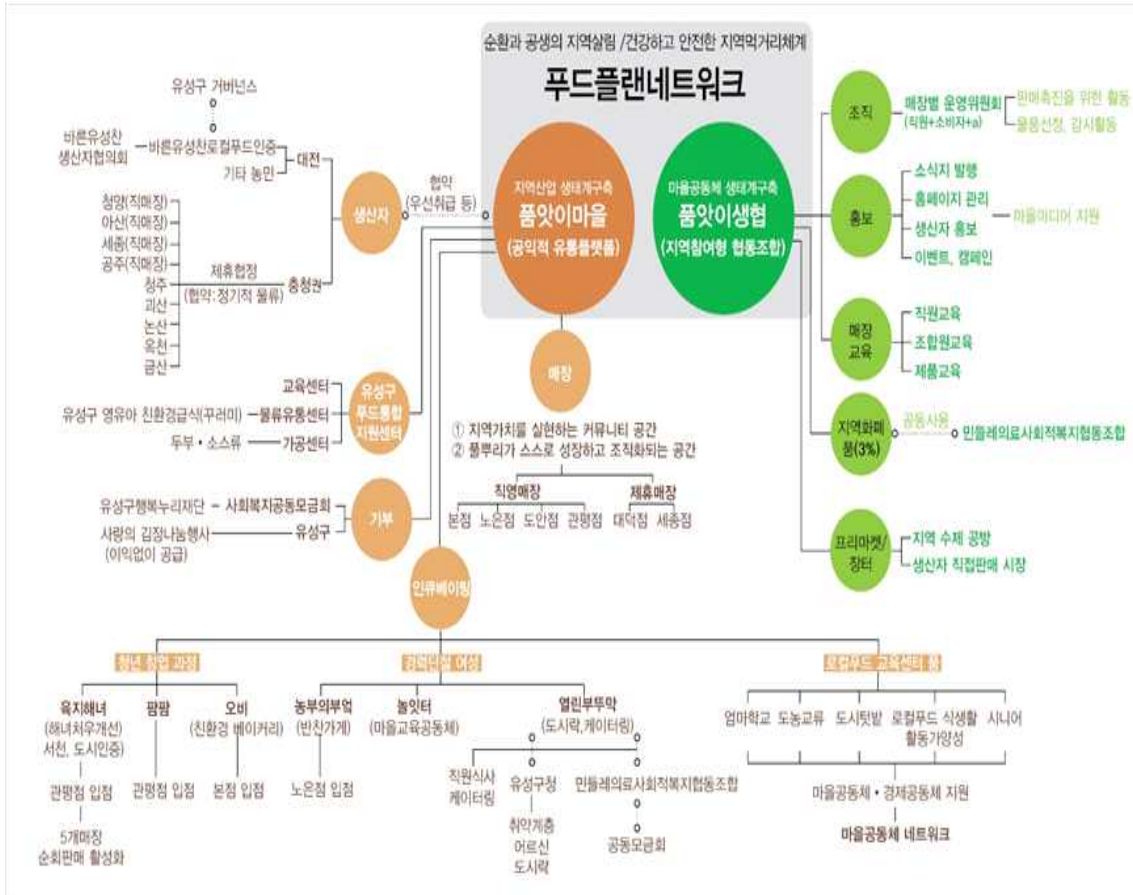
품앗이마을은 매장, 생산자, 유성구푸드통합지원센터 등의 **유통관계망과 먹거리 기부**, 그리고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의 **창업 인규베이팅 및 로컬푸드 교육** 등의 역할을 맡으며 푸드플랜 계획을 실천하고 있다.

품앗이생협은 조직, 홍보, 교육 등 마을공동체와 밀접한 **소비자활동들**을 하며 **지역화폐와 프리마켓 장터** 등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다양한 접점들을 찾아 **시민사회에서 건강한먹거리 영역을 조직하는데** 힘을 쏟고 있다.

품앗이협동조합의 헌신적 노력의 결과 2018년에 친환경로컬푸드를 통한 도농직거래를 넘어 지역의 먹거리체계를 지역중심으로 전환하고자 푸드플랜네트워크가 출범하였다. 그리고 유성구와의 민관거버넌스를 통해 유성푸드통합지원센터를 위탁받아 유통물류센터, 가공센터, 교육장을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푸드플랜네트워크는 **민관의 협력과 사회적경제, 그리고 주민들의 참여를 통해 먹거리 생산, 물류와 유통, 소비, 복지, 자원순환, 폐기 등 먹거리와 관련한 전과정을 지역중심으로 재편해** 나가고 있다. 차분하게 한발씩 지역사회와 연대하면서 순환과 공생의 지역사회라는 품앗이의 가치를 실천하는 친환경로컬푸드 혁신플랫폼으로 성장하고 있다.

〈그림 2〉 품앗이협동조합 유통플랫폼 및 푸드플랜네트워크 구성도



실험 중인 혁신플랫폼의 성과와 과제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9년 현재 대전의 혁신플랫폼은 실험 중에 있다. 사회적경제 민간성장전략을 수립했을 때의 계획과 목표를 돌아보면 이제 유통과 의료 분야에서 인프라가 구축되고 있을 뿐이며, 이와 연계된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설립되거나 질적, 양적 역량강화를 위한 시도들을 하고 있는 중이다.

혁신플랫폼의 기획에서 운영까지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민들레와 품앗이는 초기에 예산부족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이고 자발적으로 조합원들과 함께 보건예방플랫폼, 친환경로컬푸드플랫폼을 구축하며 자신들의 성공과 실패의 경험을 쌓아나갔으며, 이제 혁신플랫폼을 위한 컨설팅, 교육, 사회적기업 육성, 인재양성 등 분야별 중간지원기관의 역할을 실질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분야별 전문기관의 등장과 성장이 사회

적경제기업의 조직적으로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대전의 사회적경제 기업들도 지속적으로 순환과 공생의 내발적 성장이라는 취지를 살리며 혁신플랫폼의 실험을 통해 지역에서 필요한 자원을 연계하고, 순환하고, 지역 공동체의 역량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혁신플랫폼은 비즈니스 모델로도 전국의 지자체가 공유할 수 있을 정도로 확장력이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사회적경제의 혁신플랫폼의 실험이 대전사회적경제가 실현하려는 결실을 맺기 위해 남아있는 과제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혁신플랫폼은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과 도움을 많이 받았다. 혁신플랫폼의 소유는 공공성을 갖는 시민자산화를 해야 하며, 운용은 사회적경제 기업과 시민들이 함께 설립한 플랫폼협동조합을 통해 하도록 추진해야 한다.

둘째, 지자체와 사회적경제 영역에서 발행 중이거나 도입 중인 지역화폐를 혁신플랫폼에 적극 사용하도록 권장하여 지역순환경제의 취지를 함께 살리고 지역의 소상공인 및 복지영역에서 혁신플랫폼의 공급자로 참여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셋째, 시민들에게 의제별 혁신플랫폼의 사회적가치를 널리 알리고 지역주민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이용하도록 홍보한다. 혁신플랫폼의 홍보에 지자체의 협력이 필요하다.

넷째, 지역의 혁신플랫폼은 초고령사회 노인 문제나 친환경 학교급식 문제 등 사회적경제와 시민사회와 자치단체가 함께 다루어야 할 의제에 대한 하나의 해결방법이다. 지속적인 협의구조를 만들어야 하고, 사회적경제 내에서 지역 생협과 신협의 참여가 필요하다.

다섯째, 최근 생태환경문제의 심각성으로 에너지 플랫폼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고 풀뿌리 마을공동체를 강화하기 위한 플랫폼 형성도 시도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시도들이 기존의 플랫폼과 연계되어 지역주민들이 의제별로 치우치지 않게 시민들의 통합적 삶이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 참고자료

「대전사회적경제 민간성장전략 5개년 계획」, 조세종, 이원호, 김성훈 공저, 대전사회적경제연구원, 2015.12.

‘시민을 이롭게 하는 먹거리 종합 계획(지역푸드플랜)’, 홍은영, 대전푸드플랜네트워크, 2019.04.19. (대전광역시 새로운대전위원회 발표 ppt자료)

‘대전형 지역화폐 구상과 커뮤니티 케어’, 김성훈, 품앗이생활협동조합, 2019.04.19. (대전광역시 새로운대전위원회 발표 ppt자료)

산업통상자원부 과제 ‘커뮤니티비즈니스 활성화사업 사업계획서(비R&D)- 과제명: 주민 참여커뮤니티케어 기반 조성 및 의료, 건강 지원 커뮤니티비즈니스 생태계 구축’,

조세종, 2019. 1

[대전 지역발전 전략 세부 자료]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홈페이지 자료실

http://ksenet.org/bbs/board.php?bo_table=sub4_1&wr_id=148

http://ksenet.org/bbs/board.php?bo_table=sub4_1&wr_id=149



대구민관거버넌스의 경험과 과제

사회적협동조합동행 강 현 구

대구 민관거버넌스의 경험과 과제

좋은 거버넌스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사회적협동조합동행/사단법인대구사회적기업협의 회장 강 현 구

1. 대구지역 주요 사회적경제 조직들의 특성과 전략적 목표

대구지역 사회적경제 조직들의 주요 특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특정한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조직의 성장과 발전을 시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정한 네트워크라 함은 이념적, 경험적, 조직적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념적 측면에서는 주로 지역사회(주로 마을 단위에서의 육아, 먹거리, 교육 등의 영역에서) 공동체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이며, 때로는 정치적 결사체로서의 성격도 포함합니다. 경험적 측면에서는 문화(예술)활동, 사회운동, 교육운동(주민교육 포함)의 경험에 기반 하여 경제공동체로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는 과정에서 주로 실현되고 있습니다. 중간지원조직도 이러한 측면에서 시작되어 지속적인 혁신을 통해 지역의 주요 사회적경제 조직으로 성장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직적 측면에서 활동들은 특정한 취약계층의 조직적 이익과 성장을 도모하는 경우로서 AIDS 감염인, 탈북민, 장애, 자활참여자, 다문화 계층, 한부모 가족 등의 자립과 사회통합을 목표로 하는 경우입니다. 물론 주요한 사회적경제 조직 중 일부는 일반 시장경제 영역에서 시작하여 사회공헌적 측면에서의 역할을 강조하는 조직들도 존재하며, 규모적인 면에서는 더 큰 범위를 차지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기초 단위·업종별 영역에서부터 다양한 협업과 통합을 시도해왔다는 것입니

다. 대구지역 사회적경제 조직들은 첫 번째 특성에 의해 필연적으로 가치지향의 활동, 연대와 협업을 중요시하는 경향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자원결핍(lack of resources)에 의한 열정(passion)이 조합되는 ‘사회적기업가 정신’의 사유를 기반으로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대구지역에서 기초단위 연대와 협업의 시작은 “동구”였습니다. 동구사회적경제협의회는 2013년 초에 창립(당시는 대구지역에 이렇다 할 사회적경제 정책이 부족했고, 기초단위는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식도 부재했던 시기)하여 온갖 시행착오와 상호 작용을 통해 이제는 27개의 회원사들이 함께하는 최고의 당사자협의체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동구 사회적경제협의회는 정신은 ‘우애와 연대’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돕고, 의지하는 ‘사회적 신뢰’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업종별 영역에서의 협업과 통합은 사회적경제먹거리네트워크(2015년 설립, 대표적 사업으로 ‘파뿌리웨딩’ 프로모션 수행) 활동과 문화예술단체들의 ‘빅소셜데이’(박람회 기준 3년째 진행 중임)가 대구지역의 좋은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대구’에서 사회적경제란 무엇인가?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직접 생산하는 재화와 서비스를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산하는 재화와 서비스는 어떠한 사회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를 끊임없이 고민하는 것입니다. 생산과 노동의 과정에서 획득되는 경제적 가치를 협동과 공동체의 가치로 지속적으로 확장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특성에 기반된 대구지역의 사회적경제는 지역사회가 동의(소극적인 측면에서, 정치적으로 배제하지 않는)하고, 지역사회에 참여(2016년부터 사회적경제 주간행사를 대구지역내 가장 취약한 지역에서 공동체 참여 활동으로 추진)하는 사회적경제에 만들 기 위해 지난 10년 동안 꾸준히 실천하고 모색하였습니다. .

좋은 사회적경제 단위들과 더 많은 사회적경제인들이 상당한 합의와 실천을 통해 이러한 목표에 도달하고자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구지역의 사회적경제는 먼저 스스로가 통합하고 그 통합의 과정에서 지역사회와의 통합도 동시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대구지역의 사회적경제는 변화와 성장에 대한 주체로서, 지역사회의 혁신의 주체로서 그 역할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2. 대구지역 사회적경제 관련 주체들의 특성과 새로운 거버넌스 형성의 과정

먼저 행정의 변화를 제시 할 수 있습니다. 대구광역시는 2014년 민선 6기의 시작과 더불어 사회적경제와 마치 '전략적 제휴'가 제안된 것처럼 서로 간의 건강한 파트너십이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행정은 넓은 '포용성'으로 사회적경제와 관련된 정책(사회적경제5개년 계획 수립, 사회적경제과 신설, 사회적경제센터 신설, 대구사회적경제민관정책협의회 추진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행정은 먼저 듣고, 취합하고, 현장을 중심으로 지원하는 원칙을 확실히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정책이 아직 기초단위에까지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 대구지역은 그 어느 지역보다 '탁월한' 중간지원조직을 갖추고 있습니다. 대구지역의 중간지원조직은 '사회적경제에 대한 무한 책임'으로서 전문집단으로서의 역할을 적정하게 수행하고 있으며, 이는 대구지역 초기 사회적경제가 정착되는 과정에서의 '갈등과 협력'이 만든 '효율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대구지역은 사회적경제에 대해 상당히 우호적인 시민사회, 대학, 전문가집단들과 이웃하고 있습니다. 이 그룹들은 가능한 범위내에서 최대한 사회적경제를 이해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남대학교 경영학과처럼 특정의 그룹들은 수년 동안 맺어지지 않는 헌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사회의 여건에서 우리 사회적경제 주체들은 '주도하고자 하는 의지'와 함께 대구지역에서 사회적경제에 있어서는 'One Team'으로서의 거버넌스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영남대학교 전인 교수는 이러한 배경에서 대구지역 사회적경제 민관거버넌스의 형성 과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 분	내용
1단계 : 네트워크 구조의 형성	-사회적기업가 정신 : lack of resources과 passion의 조합 -대구시 사회적경제과와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설립 및 지원 활동 개시 -당사자협의체 활동 개시
2단계 : 보상/유인의 제공	-다양한 협업사업 실험, 경험, 신뢰 형성
3단계 : 네트워크 정체성 확립	-신뢰에 기반 한 연대의 힘
4단계 : 사회적 자본의 형성	

대구 사회적경제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네트워크를 통해 ‘신뢰’를 형성함으로써 사회적경제의 민관거버넌스가 성립되고 활성화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결국 대구의 사회적경제 민관거버넌스는 사회적경제와 관련된 ‘모두의 주체’들이 기초단위에서 부터 실천 활동에서부터 ‘호혜적 신뢰’를 형성해 내고, 결과적으로 모두의 성장이 가능한 강력한 ‘사회적경제 플랫폼’을 확보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회적경제 당사자의 성장과 확장이, 행정과 중간지원조직의 전문성과 효율성으로 결합되고, 나아가 시민사회의 새로운 동력이 됨으로서 대구지역사회의 새로운 변화를 창출하는 선순환시스템을 만들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3. 대구지역 사회적경제 민관거버넌스의 함의와 과제

지난 10년동안 대구지역 사회적경제 민관거버넌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스스로의 의지]입니다.

대구지역 사회적경제는 1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역동적입니다. 당사자의 결핍에서 촉발된 협업과 연대가 지난 10년 동안 대구지역의 사회적경제를 엄청나게 성장시켰지만, 지금도 여전히 새로운 프로젝트(좀 더 공공적인)를 기획하고 새로운 비즈니스(좀 더 개별기업 중심의)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계획과 과정 그리고 실천을 우리 스스로가 촉발한다는 것입니다. 좀 더 많은 시간이 지난다면, 지역사회 내 모든 사회적경제 주체들이 우리 스스로의 범주에서 동시적으로 움직여 나가겠지만(충분한 성장이 이루어진다면, 혹은 지금이라도 ‘창의성’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적경제의 모든 활동들이 굳이 계획적으로, 집체적으로 진

행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해서는 별도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봄), 아직은 ‘당사자성’을 주체적 의지로 하는 그룹들의 문제 제기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 시기 자본주의의 문제 해결을 위한 모든 시도들이 아직도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거나 그들만의 성과로서 끝나고 있다는 사실이, 결국 좋은 생태계도, 수 천 억원의 지원도,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실현도, ‘우리의 의지’를 뛰어넘을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구지역 사회적경제 모두에게 주어진 과제는 ‘우리의 의지’에서부터 출발한 지난 10년의 경험을 통한 ‘새로운 계획’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스스로의 역량이 부족하여, 계획은 하였지만 구체적으로 실천하지 못한 계획입니다.

먼저 대구지역 사회적경제의 범위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이는 ‘사회적경제’에 대한 포괄적 정의를 바탕으로 하는 ‘포괄적 네트워크’의 구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회문제 해결,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참여적 지배구조, 이윤 배분의 제한, 가치 기반의 재화와 서비스 판매 등의 개념을 넘어 시장자본주의에 대한 문제의식, 사회적자산의 형성, 경제공동체로까지 그 개념을 확장하는 ‘새로운 사회적경제 네트워크’를 제안합니다. 구체적으로는 개별법에 의한 협동조합, 노동조합, 공동체 조직, 공익법인, 정책연구단위 등으로까지 사회적 협력과 연대를 실현하자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사회적경제의 과제를 전지역적인 문제로 확장하여, 더 체계적이고 더 지속가능한 혁신(현시기, 어쩌면 사회적경제만이 지역사회를 바꿀 수 있는 유력한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을 추동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적경제에 대한 정책, 연구활동을 체계화 시켜내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주로 외국의 사례와 분석을 통해 사회적경제 현상을 정의하고 비전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제는 지난 10여 년의 활동에 기반한 성과 혹은 한계를 통해 보다 주체적인 분석과 정책 제안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문가 그룹과 당사자를 포함하는 지역사회 스스로의 연구활동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민관거버넌스도 좀 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물론 민관거버넌스를 단순한 ‘형식’의 문제로는 보지 않습니다)으로 작동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자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앞서 대구지역 민관거버넌스 형성 단계에서 최종적인 단계의 주제를 ‘사회적 자산’으로 규정하였듯이, 대구지역 사회적경제 혹

은 대구지역 민관거버넌스의 지속가능한 역할을 위해 필수적으로 사회적 자산의 형성이 중요한 과제가 됩니다. 일단 대구사회적경제는 ‘대구민관거버넌스 시스템’과의 협력을 통해 대구지역의 ‘사회적 금융(대구사회가치연대기금, 공제가 기반되는)’을 출범시키고자 합니다. 대구지역 사회적경제 민관거버넌스는 대구의 ‘사회적 자산’이 좀 더 공공의 이익과 모두의 성장에 대해 기여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우리가 만들어 갈 사회적경제

사회투자지원재단 사회적경제연구센터 **신 명 호**

우리가 만들어 갈 사회적경제

사회투자지원재단 사회적경제연구센터 신 명 호

김기섭 선생님의 발제문은 미래를 향한 개인적 소망을 피력한 것 같지만, 동시에 현재에 대한 진단과 문제 극복의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사회적경제 진영에 일정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게 분명하다.

하지만 그 ‘심중한’ 의미를 여과 없이 통찰하기에는 나의 능력이 태부족한 터라, 순전히 내 눈에 중요해 보이는 그의 주장 몇 대목을 골라 매우 ‘자의적’으로 해석한 후 본인의 생각을 덧붙이고자 한다. 그러니 원저자의 의도가 왜곡된 채 오롯이 나의 주관적 상념이 덧칠되는 위험이 있을 수도 있음을 미리 밝히면서 양해를 구한다.

1. ‘해방적 관점’의 상실에 관하여

‘사회적경제가 자본주의 혹은 신자유주의의 대안인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그렇다’고 보는 입장이 여기서 말하는 ‘해방적 관점’인 것 같다. 아니,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사회적경제가 사회(경제)체제의 변화와 어떤 상관관계에 있는지’를 화두로 삼는 거시적 관점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적경제가 과연 대안인가?’라는 질문에 답을 하려면 ‘사회적경제’라는 개념의 차원 내지 층위를 먼저 판단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사회적경제가 자본주의의 대척점에 있

는, 자본주의(신자유주의)와 동일한 층위의 경제체제인지, 아니면, 특정 경제조직의 유형 내지 범주인지, 혹은 조직의 운영원리인지부터 가려야 한다.

이 점에 관해서 보자면 ‘사회적경제’라는 용어는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리기에 충분한 단어적 특성을 띠고 있다. 추상화 수준이 높은 ‘사회’와 ‘경제’라는 두 단어가 합쳐지다 보니 이 용어는 흔히 한 나라의 경제 전체를 관통하는 거대한 체제 혹은 최상위의 가치체계 같은 것을 연상시킨다.

그러나 사회적경제가 자본주의(신자유주의)를 대체할 수 있는, 즉 자본주의를 밀어내고 그 자리를 대신 차지할 수 있는 대안적 경제체제라고 믿는 사람은 과연 몇이나 될까? 나는 누군가가 ‘사회적경제’를 ‘협동조합’을 한참 뛰어넘는 고차원의 그 무엇, ‘협동조합’과는 비교가 안 되게 강력하고 보편적인 무슨 가치체계 같은 것이라고 상상한다면 그 것이야말로 대단한 착각이라고 생각한다.

분명 ‘사회적경제’는 ‘협동조합’보다는 넓고 큰 범주의 개념이지만 양자가 차원을 달리할 만큼의 ‘다름’을 갖고 있다고는 보지 않기 때문이다. 사회적협동조합이든 사회적기업이든 마을기업이든 간에, 그 원리와 가치와 궁극의 지향이 협동조합의 확장 및 진화의 연장선 상에 있을지언정 근본적으로 종(種)이 다른 그 무엇은 아니라는 얘기다.

그렇다면 사회적경제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온갖 골치 아픈 질문들에 대해서 비교적 수월하게 답을 유추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예컨대, ‘과연 자본주의(신자유주의)의 대안인가?’라는 위의 질문을 비롯해서 ‘사회적경제는 실업과 빈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사회적경제는 정책인가 운동인가(혹은 운동이어야 하는가)’, ‘사회적경제는 우리 사회를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가’, ‘사회적경제는 신자유주의의 또 다른 포섭 전략은 아닌가’에 이르기까지, ‘사회적경제’라는 낱말의 자리에 대신 ‘협동조합’을 집어넣고 다시 질문을 읽어보는 것이다.

‘협동조합은 자본주의(신자유주의)의 대안인가?’ — 이걸 꽤 오래된 질문이고 19세기 협동조합 운동의 일부 선구자들은 확신했던 명제이기도 하지만, 오늘날 협동조합이 대안적 경제체제의 지위를 가졌다고 믿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2) 일도양단의 이분법을 지양하고 양 측면을 모두 인정하고 수용하자는 식의 어설픈 절충안은 여기서도 고려하지 않기로 한다. 현실적 절충주의의 흐름은 서두르지 않아도 언젠가 나타나 힘을 발휘하기 마련이므로 우선은 엄격한 논의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본래 협동조합이 반(反)자본주의 내지 탈(脫)자본주의의 지향을 갖고 있는 것만은 틀림없다. 협동조합이 자본주의의 대안은 아닐지라도 자본주의에 대한 반작용(reaction), 또는 대응물(response)로서 탄생한 것은 부정할 수 없다. 따라서 협동조합에는 반자본주의 내지 탈자본주의의 DNA가 깃들여 있다. 협동조합의 정신과 원리는 확실히 반(탈)자본주의적이다. 그렇다면 이처럼 반자본주의적 유전자를 가진 협동조합이 왜 자본주의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데는 성공하지 못했을까?

그것은 협동조합은 철저히 미시적 차원의 운동이기 때문이다. 협동조합은 일정한 지역을 근거로 일정한 범주의 사람들에 의해 조직되고 작동된다. 대부분의 사회운동이 그렇듯이 미시적일 수밖에 없다. 그 미시적 운동이 어떻게 경제구조 전체 또는 사회 전체의 변혁으로 이어질지는 누구도 알 수 없다. 그 중간에는 철학 같은 블랙박스가 놓여 있다. 나비의 작은 날개짓이 거대한 태풍을 몰고 올 수 있다는 막연한 믿음이 있을 뿐, 나비의 날개짓이 어떤 경로와 과정을 거쳐서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는지, 하는 메커니즘은 알지 못한다.

‘협동조합은 지금까지 우리 사회를 얼마만큼 변화시켰을까’라는 물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의 답이 가능하겠지만 가장 합리적인 추론은 ‘전혀 변화시키지 못했다’와 ‘급격하게 변화시켰다’는 양극단의 중간 어디쯤일 것이다. 그랬을 때 협동조합이 (얼마만큼이 되었던)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온 힘의 원천은 무엇이였을까?

2. ‘보다 근본적이고 다른 수준에서’의 중요성

하나의 미시적 운동이 기존 질서의 변화에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장 크게 하는 방법은 그것이 지향하는 ‘보다 근본적이고 다른 수준에서’의 원리에 투철해지는 것이다. 협동조합의 유전자 속에 있는 반자본주의적 원리를 철저히 실천하는 것이며 그것을 미시적 차원에서 구성원들의 삶 속에 깊이 심는 것이다.

인류의 역사에서, 또는 우리나라 현대사에서 협동조합이 (보다 인간다운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한 바가 있다면 그것은 순전히 기본 정신과 원리에 충실한 개별 조합들의 (미시적 차원에서의) 지극한 실천이 가져온 결과이다.

세계 협동조합의 역사에는 영욕이 교차한다. 협동조합의 아름다운 원리가 확립될 때까지 선구자들의 눈물겨운 분투가 있었는가 하면, 20세기의 어떤 협동조합들은 시장에서의 경쟁에 골몰한 나머지 영리기업 뺨치는 수준으로 변신하기도 하고 심지어 부정부패의 대명사가 되기도 했다.

협동조합 담론³⁾의 아름다움이 언필칭 모든 협동조합의 모든 활동을 정당화하지는 않는다. ‘보다 근본적이고 (자본주의와) 다른 수준에서’의 원리에 투철한 협동조합이 있는가 하면, 그런 원리와 무관한 이름뿐인 협동조합도 있다. 협동조합이 보다 큰 세계—거시적 차원의 변화에 기여하리라는 희망을 품을 수 있게 해주는 것은 오직 전자에 한해서다. 후자는 아무리 그 수가 많아도 소용이 없다.

사회적경제도 마찬가지다. 사회적경제 담론이 ‘사회적경제’답지 못한 조직들의 ‘사회적경제’답지 못한 행태에까지 면죄부를 주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이러저러한 윤리적 원칙들에 기반해 있으므로, 또는 신자유주의의 폐해를 해결하고자 하므로 사회적경제는 언제나 그 자체로서 선(善)’이라는 식의 과장된 담론은 사회적경제다운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하려는 우리의 분별력을 흐리게 만든다.

선한 철학에 기반해 선한 목적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회적경제에 대해서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다다이선(多多益善)의 정부 지원만이 요구된다는 식의 주장 앞에서는 해방적 관점의 어떤 거시적 질문도 설 자리를 잃게 된다.

다시 앞서의 질문 하나로 돌아가보자. ‘협동조합은 빈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서기 2000년의 협동조합』이라는 제목을 달고 있는 <레이들로(Laidlaw) 보고서>는 이렇게 말한다: “... 협동조합은 국가와 달리 부(富)를 이전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협동조합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빈곤의 조건과 같은 문제는 책임질 수 없다. 협동조합이 최선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빈곤층에 대하여 편견을 갖지 않고 그들을 돕기 위하여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이는 일이다”(레이들로, 2000: 14)⁴⁾

3) 미셸 푸코는 담론(談論)을 ‘특정 대상이나 개념에 대한 지식을 생성시킴으로써 현실에 관한 설명을 산출하는 언표들의 응집력 있고 자기지시적인 집합체’라고 어렵게 정의한 바 있으나, 그냥 ‘어떤 주제에 관해 사람들이 말이나 글로 주고받으며 논의하는 내용’ 정도로 이해해도 무방하겠다.

또 협동조합 운동가 에드가 파넬(E. Parnell)은 이렇게 진단한다: “협동조합과 상조조합들이 직접 가난의 원인들을 없앨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드물지만, 일단 조직을 만들면 조합원들에게 가난을 완화시켜주고 때가 되면 가난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가능성은 많다.”(파넬, 2012; 40-41)⁵⁾

이들의 말을 종합하면 대략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한다; ‘협동조합은 빈곤 해결을 위한 보편적 정책수단이 아니다. 다만, 어떤 가난한 사람들이 협동조합을 조직했을 때 그들이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전망을 가지고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결론은 사회적경제라는 확장된 개념에 고스란히 적용해도 성립한다.

3) 개체의 전일성, 그리고 거피취차(去彼取此)

지금 여기 일단의 가난한 실업자들이 있다고 할 때, 내가 이들과 함께 노동자협동조합을 만드는 이유는 협동조합이 실업/빈곤을 해결해준다는 이론을 믿어서거나, 혹은 협동조합을 통해서 자본주의 체제에 파열구를 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기 일자리를 필요로 하는 가난한 사람들의 절실한 욕구가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협동조합 운동의 정당성은 거시적 차원의 담론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바로 미시적 차원의 필요에서 나온다는 말이다.

거시적 관점에서 사회적경제에 의미를 부여하는 담론의 내용들은 대체로 정확한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있거나 과장된 부분이 많다. 예컨대, 사회적경제 운동이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폐해에 맞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아가 자본주의를 넘어서는 새로운 사회적 관계를 창출하고자 하는 운동으로 확장된다’(정은미, 2012: 330)⁶⁾는 주장에서 수긍할 수 있는 어떤 근거도 발견할 수가 없다. 지금 우리나라의 사회적경제 확산 현상을 보면, 도무지 그런 새로운 운동으로 확장되리라는 상상을 하기가 어렵다.

4) 레이들로, 2000, 『레이들로 보고서-서기 2000년의 협동조합』, 한국협동조합연구소 출판부,

5) 에드가 파넬, 2012, 『협동조합, 그 아름다운 구상』, 그물코.

6) 정은미, 2012, “1980년대 이후 생협운동의 다양한 흐름과 갈래”, 김형미 외 편, 『한국 생활협동조합운동의 기원과 전개』, 푸른나무.


그러나 이것을 과학적인 예측이라기보다 간절한 변혁에의 꿈이라고 해석한다면 우리는 그 꿈을 소중히 키워나가는 것이 마땅하다. 내가 지역에서 만드는 노동자협동조합이 마침내 우리 사회 전체의 큰 변화로 이어지리라는 소망을 가지고 행동해야 한다. 그리고 내가 속한 하나의 개체가 마침내 변화된 전체의 일부가 되는 꿈에 다가가는 길은, 앞서 말했듯이 ‘보다 근본적이고 다른 수준에서’의 원리에 투철해지는 것이다. 자본주의를 넘어서려는 꿈은 그것이 언제, 어떤 모습으로 실현될지 알 수 없지만 본래의 정신과 원칙을 망각하지 않은 협동조합다운 협동조합, 사회적경제 조직다운 사회적경제 조직에 의해서만 앞당겨질 수 있을 것이다.

여러 가지 문제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사회적경제에 여전히 희망을 가지게 되는 것은 이 포럼에서의 발표 사례와 같은 건강한 지역 조직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런 사례들을 접하면 앞서의 ‘사회적경제가 실업/빈곤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가’, ‘사회적경제를 운동이라고 할 수 있는가’, ‘사회적경제는 지역사회를 변화시키고 있는가’ 등등의 공세적 질문 앞에서조차 과히 부끄러워지지 않는다.

그것은 이들이 담론 차원에서 사회적경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필요와 욕구에 집중하고 사회적경제의 원칙에 철저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왔기 때문이다. 일례로, 오래전부터 <즐거운 밥상>을 관찰해온 경험에 의하면, 명실상부하게 일하는 사람들이 주인인 조직을 만들어가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돈보다 사람을 중시한다는 신조가 구호에 머물지 않고 당사자들이 체감하는 조직문화로 자리 잡을 때 그것이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지 등을 깨닫게 된다. 이들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효능과 정당성을 거창하고 아름다운 담론으로 입증하는 게 아니라, 지역에서 원칙에 충실한 실천을 함으로써 보여주었다. 이 같은 사례들이 사회적경제 부문의 일부가 아니라 보편적 다수를 이룰 만큼 많아질 수 있다면, 언젠가 신자유주의를 밀어낼 것이라는 희망을 품는 일에 훨씬 죄책감을 덜 가질 것 같다.

그리하여 결론 삼아 한자성어로 어쭙잖게 김기섭 선생님의 흉내를 내보자면 노자의 ‘거피취차(去彼取此)’가 어떨까 싶다. ‘저것을 버리고 이것을 취한다’는 뜻인데 ‘저것’이란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가 마땅히 도달해야 할 세계—공자가 말한 규범적으로 바람직한 보편적 이념의 세계다. 반면, ‘이것’이란 바로 내 앞에 있는 자발적 생명력의 세계이고, 바람직한 것이 아니라 내가 바라는 것이다.

비유하자면, 멀리 있는 저것—거대 담론을 버리고, 바로 앞에 있는 지역의 필요와 원칙에 집중하자는 얘기다. 「사회적경제는 언제나 정당하다 → 나는 사회적경제다 → 고로 나는 언제나 정당하다」는 식으로 더 이상 담론의 힘을 빌려 우리 운동의 가치를 내세울 건 아닌 것 같다. 내 앞의 지역 문제에 골몰하고 그 과정이 온당하고 부끄럽지 않을 때 우리가 바라는 큰 세계의 변화가 한 발짝 다가오는 게 아닌가 싶다.



不盈科不行(불영과불행)

원주밝음신탁 상임이사 **장 동 영**

不盈科不行(불영과불행)

원주밝음신협 상임이사 장 동 영

신협에 몸담고 있습니다만 사회적경제에 대하여 잘 모릅니다. 사회적경제영역에 대하여 국외자(局外者)적인 시각으로서 토론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 자리에 오게 되었습니다. 평소 신협인으로서 사회적경제의 한 영역에서 활동해 왔다고 생각하고 있었기에 제안을 받고 조금 당황스러웠지만 배움의 기회로 알고 왔습니다. 덕분에 간략하게나마 사회적경제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발제문과 현장사례를 받아보고, 평상시의 생각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너그러이 도움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자료를 찾아보면서 느낀 것은 사회적경제에 대한 ‘정의’ 자체가 참으로 다양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제 자신은 아직도 명확하게 “사회적경제는 이것이다.”하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단지 <2018 사회적경제 국제포럼>에서 기조연사였던 폴 래드(유엔사회개발연구소장)의 “사회적경제는 이윤보다 사회적, 환경적 목표를 우선으로 삼고, 경제활동에서 윤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민주적 자주관리와 적극적 시민의식의 관점에서 경제적 실천을 성찰함으로써, 경제에 대한 사회의 통제력을 회복하려는 움직임이다.”라는 말에서 사회적경제가 지향하는 바를 어렵듯이 느낄 뿐입니다.

사회적경제 문외한인 제게 ‘내가 꿈꾸는 사회적경제’라는 김기섭 박사님의 글은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먼저 사회적경제에 대한 시각을 첫째, 시장사회의 대안이 마련될 것

이라는 ‘해방적 관점’, 둘째, 실업과 복지문제 같은 국가와 시장의 한계를 보완하는 기능으로 보는 ‘보완적 관점’, 마지막으로 공공부문의 민영화 전략 가운데 하나 일 뿐이라는 ‘비판적 관점’의 세가지 관점으로 분류하고, 현재 우리나라 사회적경제는 해방적 관점은 빠진 채 보완적 관점, 그것도 대부분 국가정책에 규정당하여 ‘일자리 창출’이 보완의 거의 전부라고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유럽의 경우는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실업문제, 시장세계화에 따른 복지국가의 위기 상황에서 사회적경제가 (재)활성한 반면, 우리나라 사회적경제는 고용의 위기와 동시에 생존(노동)의 위기, 복지전환 이전에 복지부재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인데, 그 체력조차 대단히 취약하다고 진단하였습니다. 소상공인과 서민을 많이 접하는 신흥 현장에서는 크게 다가오는 말씀입니다.

김박사님께서서는 구성원 각자가 자유롭게 상상하면서 사회전체를 바꿀 해방적 비전을 그리면서, 한 인간과 그들의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기능주의를 넘어 하나의 완성된 개체로 끊임없이 나아가고, 이런 실천들이 지역차원에서 모여 한 인간을 살려내고 사회전체를 바꾸는 해방적 연대를 모색하면서, ‘공익’과 ‘사회적가치’의 추구를 넘어 한 사람, 한 사람을 생명의 본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회적경제를 꿈꾼다고 하였습니다. 즉 내부적으로 전일적 개체를 지향하면서, 외부적으로는 이런 지향을 담은 개체들이 더 큰 차원에서 다원적 개체로 연대한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어떻게 시작할까요? 저는 인간존중이라고 생각합니다.

신흥에서 활동하면서 협동조합운동이란 과연 뭘까? 늘 자문해 보곤 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답이 있었지만 가장 와 닿은 답은 인간존중운동, 즉 스스로의 자존감을 찾고, 그만큼 상대방을 존중하는 운동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자존감을 통해 자립의지를 세우고, 자립한 개인과 단체들이 상호존중의 마음으로 협동하고 연대하여 나가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자존감은 구성원 각각의 자존감을 말합니다. 리더그룹 만의 자존감이 아닌 참여자 모두의 자존감 회복!

원주의 협동조합 리더들께서는 이 점을 아주 중요시 했던 것 같습니다. 협동운동을 하면서, 구성원(참여자)들의 자존감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동의 진행과정에 자연스럽게 녹여내었습니다. 과거 1970년대 재해대책사업위원회의 활동이 그러했고, 가까이는

노숙인급식소 ‘십시일반’의 활동이 그러했습니다. 그 바탕에는 지도자들의 자기헌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지속적인 교육이 동반합니다.

자존감에 대한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일본의 치바현에서 생협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바람의 마을’이라는 사회복지법인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이 법인은 ‘인간존중’의 정신으로 시설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배울 점이 많았는데 그 중에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움직임이 아주 불편한 노인일지라도 배변이나 목욕을 할 때 가능한 한 본인의 힘으로 해결하도록 시설을 운영하는 것이었습니다. 시설관리자는 소극적인 최소한의 지원만 합니다. 업무처리에 시간과 노력이 배(倍)로 들텐데도 그렇게 하는 이유를 물어 보았습니다. 법인이사장의 답변으로는 “배변을 스스로 하지 못하고 남에게 맡기는 상황이 되면 치매의 정도가 급격히 심해집니다. 이것은 아마도 자존감과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스스로의 일을 본인의 힘으로 통제할 수 없게 되었을 때, 그 수치심 때문에 정신적인 통제력을 스스로 놓아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치매입니다. 그래서 자존감 유지를 위해 배변과 목욕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은 매우 중요합니다.” 의학적으로 맞는 설명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심정적으로는 크게 공감되었습니다.

요즘 사회적경제가 급속히 확산되고 기능적인 면이 강조되면서 참여자들을 사업의 부속품쯤으로 여기는 일도 가끔 있는 것 같습니다. 잠깐의 성과를 낼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봅니다. 설령 고용같은 사업적 성과가 있었다할지라도 이것이 진정한 사회적경제 성과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자존감을 기반으로 하지 않은 구성원들의 필요와 욕구의 해결이 궁극적인 사회적문제의 해결로 연결될지 알 수 없습니다.

얼마 전 사회적 금융관련 회의를 가서 있었던 일입니다. 젊은 시절 노동운동을 오래 하셨던 분께서 참석하셨는데, 그 분으로부터 1988년에 어떤 어른을 찾아뵈었던 일에 대해 듣게 되었습니다. 노동운동을 하고 있던 소속 단체에 맞는(필요한) 문구, 경구(警句)의 붓글씨를 부탁드렸다고 합니다. 그 때 받은 글이 ‘물과 같이’였다고 합니다. 격렬한 시국(時局)통에 그 작품은 잃어버렸지만, 그때 붓글씨를 써 주시며 하셨던 어른의 말씀을 아직까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자네들은 운동을 불(火) 같이 하는구면...아주 위태로워 보여!... 운동은 물(水)과 같이 해야 하는 거라네. 유연하게...낮은 곳으로... 낮은 곳

부터...꾸준히 빠짐없이 채워나가면서..”

不盈科 不行(불영과 불행)! 맹자에 나오는 말입니다. “흐르는 물은 웅덩이를 채우지 않고서는 앞으로 나가지 못한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사회적경제에 대한 자세도 이러해야 한다고 봅니다. 기능적으로는 웅덩이를 우회하거나 빠른 속도로 넘어서는 것이 효율적일 수도, 가능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운동으로서의 사회적경제는 웅덩이를 채우고 넘어서야 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웅덩이를 채우고 나아갈 때 김박사님께서도 말씀하신 해방적 관점의 사회적경제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웅덩이를 채우는 것은 참여자들의 자존감, 참여자들의 협동으로 가능할 것입니다. 물론 리더들의 끊임없는 자기헌신과 지속적인 교육이 같이해야 하겠지요!

저도 문득 갖는 의문이지만 다른 분들도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바쁜 세상에, 어느 세월에 웅덩이를 채우고 있습니까? 사회적 가치의 실현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데! 웅덩이는 대충 대충 뛰어넘더라도 빨리 사회적 문제를 해결해야지!!”라고 반문합니다. 웅덩이를 대충 빨리 뛰어 넘거나 우회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고 똑똑(?)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웅덩이를 채우고 나아가는 것만이 물이 역류하지 않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애써 그 확실한 방법을 여러 가지 이유를 들며 무시합니다. 그 결과 역류(逆流)를 경험합니다. 일부이지만 사회적경제 분야에서도 비슷한 경험들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지역의 선구자들께서는 웅덩이를 묵묵히 채워 나가셨습니다. 때로는 당신들 생(生)에서 미처 다 채우지 못한 웅덩이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꾸준히 참여자들의 자존감을 키워주고, 자기헌신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웅덩이를 채워나가는 과정 자체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거인의 어깨위에서 보다 넓게 세상을 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유명한 과학자가 한 말이라고 합니다. 생각이 짧은 탓에 저는 뉴턴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오류를 뒤엎고 새로운 이론을 정립하고, 또 아인슈타인이 뉴턴의 오류를 뒤엎고 새로운 세계를 열어 온 것이 과학사(科學史)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뉴턴은 아리스토텔레스를 비롯한

여러 과학자들의 연구가 있었기에, 그리고 아인슈타인은 뉴턴이라는 거인의 어깨에 올라서 있었기에 더 멀리 볼 수 있었습니다. 이전 인물들의 업적이 없었다면 어떤 뛰어난 과학자라고 할지라도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기껏해야 이전 과학자들의 성취정도 만 이룰 수 있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인의 어깨 위에 난장이가 되려합니다. 그러나 거인이 없다면 난장이는 결코 멀리 볼 수 없습니다. 모두가 난장이가 되려고만 할 때 멀리 보는 것은 가능하지 않을 것입니다. 심지어는 거인의 어깨 위에 있으면서 거인의 존재를 잊고, 거인의 키가 자신의 높이라고 착각하는 난장이라도 왕왕 있습니다. 내가 채워가는 웅덩이 물이 모여 거인의 어깨를 만들어 낸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토론회에 참여하면서 많은 것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많이 줄었지만 사회적경제와 신협을 동떨어진 것으로 인식하는 분위기가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도대체 뭘까? 돌아보았습니다.

그 이유의 첫째는 신협이 신협 본래의 목표인 복지사회건설 보다는 기능적인 금융업에 매몰되어 있었습니다. 둘째는 내부직원 및 조합원교육의 부재로 인하여 우리가 지향하는 가치를 잊고 있었습니다. 셋째는 같은 가치를 지향하는 신협 사이에도 불필요한 경쟁과 질시가 있었습니다. 넷째는 좋을 때는 내 덕, 어려울 때는 사회여건을 탓하는 게으름이 있었습니다. 다섯째는 조합원들에 대한 지적 오만함으로 상대방에 대한 존중감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번 박람회 계기로 김기섭 박사님의 깊은 철학과 각 지역에서 닦고 싶은 모델을 만들어가고 계신 훌륭한 분들을 만날 수 있어 좋았습니다. 덕분에 자존감을 한껏 재충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신협이 저질렀던 실수를 겪지 않으시길 기원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신협이 겪었던 실수를 교훈으로 삼아 보다 멀리 넓게 볼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많이 부족하다고 하지만 우리나라 신협은 2020년에는 환갑을 맞습니다. 신협을 거인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신협이라는 거인의 어깨를 밟고 보다 멀리 넓게 살펴보시고, 사회적경제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시길 기원합니다.

발표사례에 대한 감상.

“현장의 실천 사례에 대하여”

대전 사회적경제 혁신플랫폼

사회적경제 민간성장전략으로 인프라구축과 생애주기별 협동조합 설계라는 두 축을 설계하고 진행한 과정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유통영역과 보건의료돌봄영역 두 가지 인프라 구축이 성과를 내고 있다고 하니 축하드립니다. 원주에서도 통합돌봄 플랫폼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 노하우를 배우고 싶습니다. 또한 로컬푸드 플랫폼과 푸드플랜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먹거리와 관련한 전과정을 지역중심으로 재편해 나가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 또한 벤치마킹하고 싶습니다.

궁금한 것은 보건예방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이 적지 않을텐데, 그리고 혁신플랫폼을 구축 초창기 예산부족의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해결해 오셨는지 궁금합니다. 지역혁신플랫폼에 지역생협과 신협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그 동안 잘 안되었던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대구 민관거버넌스의 경험과 과제

행정의 적극적인 변화, 중간지원조직의 탁월함, 그리고 사회적경제에 대해 우호적인 시민사회, 대학, 전문가집단들이 있어 ‘One Team’으로서의 거버넌스를 만들어 나가고 있는 대구가 부럽습니다.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네트워크를 통해 ‘신뢰’를 형성하고, 결과적으로 강력한 ‘사회적경제플랫폼’을 확보했다고 했는데 그 신뢰형성의 노하우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또한 대구 사회적경제 민관거버넌스의 가장 중요한 것은 [스스로의 의지]라고 하셨는데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앞으로의 과제로 제시한 ‘확장된 사회적경제네트워크’, 정책 연구활동의 체계화, 사회적자산화 잘 성취하시어 전국적으로 좋은 모델을 제시해 주시길 기원합니다.

한살림제주의 사회적경제활동 경험

한살림생협이 주축이 되어 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를 이끌어 오신 것이 인상깊습니다. 다양한 네트워크 활동을 주관하셨는데, 한살림제주 내부에는 사회적경제위원회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 역할을 어떻게 수행해 오셨는지? 사회적회계를 도입하여 성과지표 관리를 한다고 하셨는데 그 효과는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즐거운 밥상 활동보고

쉽지않은 경제여건에서 자활기업에서 출발하여 성공적인 노동자협동조합으로 정착한 모습에 감명받았습니다. 2014년 이후 매출액의 변동이 없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직원들의 자존감, 소속감을 높이기 위하여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시민사회와 사회적경제

한국YMCA연맹 사무총장 김 경 민

사회적경제와 시민사회

전국YMCA연맹 사무총장 김 경 민

자본의 전일적 지배라는 부문에서, 자본이 첨단기술과 결합되어 향후 우리의 삶을 규정짓고 확정지을 사회에서 사회적경제가 대안인가? 이런 큰 담론 앞에서 한국사회의 사회적경제를 말하면, 거대담론에 대해 사회의 본질적 현상에 대안을 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대안을 만들고자 하는 다양한 사회경제적 실험이 있고, 사회적경제가 하나의 큰 흐름 형성하고 있는가라는 지점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본다.

오늘 이 자리의 논의 내용은 그 층위가 매우 다양하다. 개별 조직에 집중한 이야기에서부터 세계경제의 대안적 흐름까지 폭이 넓은데, 이것을 나름대로 엮어주는 징검다리로서의 시민사회를 말하고 싶다.

처음 사회적경제 운동이 제기되었을 때 '시민사회 내에서 사회적경제 운동'을 주제로 한 토론이 많이 되었다. 사회적경제가 제도화되었던 것은 노무현 정부 말기이고, 실제로 사회적경제가 운용되었던 것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 10년을 거치면서이다.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사회적경제가 가지고 있던 시민사회적 영성은 상당히 고갈 약화 되었다고 생각한다. 그러한 판단의 배경으로 사회적경제를 역사적 연원까지 자세히 살펴보면, 시민사회를 모태로 탄생한 것이 사회적경제라 할 수 있다. 사회적경제 운동은 시민사회운동의 한 영역으로서, 혹은 시민사회 내의 한 대안으로 탄생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시민사회와 사회적경제가 전혀 다른 각론 상의 영역이 아니라, 대단한 근친성 가진 사회활동이고 조직활동이라 할 수 있다.

본인은 사회적경제 운동 초기에 지역에서 활동을 시작했고, 지금도 계속하고 있다. 사

회적기업 활동을 하면서, 충남 즐거운밥상의 사례에 많은 공감을 하게 된다. 기업을 직접 운영하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다. 이 시점에서 사회적기업 설계와 운영과정을 보면 중간지원조직과 사회적금융 등이 생겨났지만, 단위조직으로서의 사회적경제 기업의 활성화와 역동성을 지지하는 방식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게 할까 생각해야 한다. 행정조직과 소통도 하고 여러가지 방법이 있지만, 지금 사회적기업 시작 후 10년이 넘었는데 객관적으로 현실 파악해보면, 사회적경제 조직이 갖는 사회적 힘이 얼마나 되는가? 우리의 현실적 문제를 해결하는 정치적 의제로 만들 수 있는지를 고민해야 한다.

우리사회에서 사회적경제가 대단히 중요하고, 대안의 가능성 가진 세력과 조직이라 전제하면, 사회적경제에 친화적인 정부와 사회를 만들어야 하고, 만들기 위한 힘을 작동시켜야 한다. 그러기 위해 경로설계를 고민해야 하는데, 그중에 한 단계가 시민사회와 사회적경제가 깊은 단위로 소통하는 것이다.

시민사회 영역을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간단히 말하면 한국사회의 온갖 이슈와 아젠더가 각축하고 논의되는 시장이라 할 수 있다. 이슈와 의제 시장이다. 여기에 대해 시민사회 운동 주체들이 이슈를 각 영역별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 그것이 시민사회이다. 그것이 좁은 의미의 협의회, 시민단체로 보이는데, 이것이 사회적경제 조직과 별로 차이가 없을 것이다. 좀 더 들어가면, 시민사회가 가지고 있는 이슈와 의제들이 사회적경제 공간으로 가서 지속적인 운동, 사업으로 현장화 되기도 해야 한다. 역으로 사회적경제 조직은 시민사회와 소통하고 연대하는 형식을 통해서 자신의 시민사회적 정치력을 높여나갈 수 있다. 안타깝게도 두 영역이 서로 전혀 다른 것처럼 여기는 분위기가 있다. 시민사회는 사회적경제에 대하여 경제조직에 불과하다, 사회적가치를 실현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제기를 하기도 하고, 사회적경제는 시민사회가 고도로 정치화되었다 하기도 하지만, 지금 단계는 처음 출발처럼, 시민사회와 사회적경제의 상상력과 이론적 토대 안에서의 근친성을 새롭게 재설정, 재구현 하느냐하는 과제를 가지고 있다고 본다.

덧붙여 우리의 역량에 대한 판단에 달린 문제이지만, 한국사회에서 자신의 사회적 의지, 존재의지를 관철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의 사회적 힘에 관한 것이다. 하나의 의결 주체로서, 거칠게 잡아 2만명 정도가 동일한 공간에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조직력을 가지는 것에 관한 것이다. 현재 한국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조직이 민노총, 한노총,

태극기부대, 교회가 있다. 사회적경제 조직은 예를 들어, 사회적경제기본법을 관철시키자고 할 때 사회적경제인 2만명이 모여서 우리의 의지를 펼칠 역량이 있는가 물을 때, 나는 그럴 수 있다고 본다. 다만 한 번도 시도를 하지 않았을 뿐이다.

지금 사회적경제에 대한 브랜드는 중저가로 평가 절하되어 있다고 본다. 정부에서 도움만 받는 그러한 조직으로 인식되고 있다. 사회적경제가 사회적으로 해내는 일에 비해 저평가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한편으로 우리를 돌아보면, 사회적기업의 정체성과 사회적경제 운동의 중심적 트랙의 간격이 벌어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가복지의 보충적 기능으로 떨어져. 사회적 존경을 받고 의미를 생산하면서 가야 하는데, 중하급 취약계층 일자리 사업, 공공근로에서 한 단계 높은 레벨의 일자리 사업 정도로 이해된다거나, 생산품과 용역의 질도 떨어진다든 평가 받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것인가 생각해 봐야 한다. 한국사회 민주적 가치, 평화적 가치를 만들어 가는 데에 총론적으로, 민주화 지형도 안에서의 위치라던지. 기업과 정부에 관리 포획되어 주권 자주성이 떨어져 있는 문제도 성찰의 대상이라 하겠다. 민관거버넌스도 잘 되고 있기는 하지만,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요구의 구도 안에서만 움직이고 있는 형편으로 보인다. 사회조직이 가지고 있는 기존의 가치체계 넘어서는 혁신성, 체제 초원적인 지평을 기대하게 되는 시점이 온 것이다.

사회적경제 기업조직은 생산체제와 시장을 확보해야 하고, 유리한 행정적 사회적 환경 조성해야 한다. 지금 사회적경제 조직은 강력한 정치집단이다. 대구를 보더라도 기업의 갯수가 400개가 넘는다. 지방정부에 주장하고 예산 편성을 요구하면 된다. 도시재생 등 사회적경제 관련 예산이 크다. 운동적으로 대응하면 매우 규모가 크고 의미가 있는데, 사회적경제 조직이 개별화되어 있고, 협의회는 이권 조직과 다른 행동을 함으로써 운동세력화 하는 데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회적경제가 자신의 위치를 정책의 시혜 대상으로 놓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우려가 된다. 이제, 기업이나 정부 등 도움이 될 수 있는 경제주체의 시혜적 대상이 아닌 주체가 되어 우호적 환경을 조성하자는 생태계 조성의 문제, 사회적경제로 사회적가치를 생산하자는 주체의 자리에 전환해서 놓아야 할 때이다. 우리 사회의 중요한 의제에 주요한 주체가 될 수 있다. 운동이 생기면 가치가 생기고, 가치가 생기면 자본이 생긴다는 것이 사회적경제의 기본 원리 아닌가. 사회적경제 운동이 양적으로 규모가 성장한 것은 긍정적이지만, 사회의 역동적 주체로 전환할 것인지 논의가 일어날 시기이다.

또한 사회적경제가 신자유주의 모순을 가리는 역할을 하고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사회적경제 운동이 조직적 힘을 결집, 자기의식화 하는 행동이 없으면 비판을 면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체제 모순에 대응하는 주체를 형성해야 하는데, 지금처럼 각론화되어 있어서 곤란하다. 사회적경제는 대중적이고 경제적 역동성 가지고 있어서 대응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사회적경제는 신자유주의 모순을 탄력적으로 흡수하면서 경제적 공간을 만들어 낼 수 있는 목적의식적 전략을 가져야 하는데, 관과 대자본에 포획되어 대기업의 하청 구조로 사회적기업을 만들어 온 것은 아닌지, 자기의식과 자기 존재 목적에 대한 자기 해석을 가진 대중조직으로 만들어 가야한다.

그런 의미로 지금은 우리 사회적경제의 힘을 가지고 사회적 아젠더화, 정치적 의제화 하는 단계로 진입해야 하는 단계는 아닌지 진지한 검토가 필요하다. 사회적경제 안에는 지금 살아가는 사회를 초과하는 사회적 원리와 가치를 담겨 있기 때문에 운동이라 생각한다. 사회적경제의 정신과 원천을 제대로 찾아서 제대로 열심히 하는 것이 시민 운동이라고 하면 여기에 도전할 수 있는 어떤 논리도 있을 수 없다. 미시적으로 다양한 시민운동이 큰 단위에서 만나서, 다양한 공동체들이 생명과 평화가 만발하는 꽃밭을 만들어 가는 또 하나의 시민 조직으로서 사회적경제 조직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런 차원에서 시민사회와 사회적경제의 연대, 혹은 동행이 사회적경제 조직을 사회 세력화, 정치적 의제화하는 과정에서의 중간단계로 살펴보고 검토해야 할 시점이다.



2018 사회적경제 보고서

- 보고서를 제출하기 까지
 - 5월 1일, 박람회 추진위원회에서 선언문을 작성하기로 결정
 - 6월 3일, 강현구 민간추진단장, 선언문의 근거 자료가 되는 보고서 작성을 신명호 사회투자지원재단 사회적경제연구센터 소장에게 의뢰함
 - 6월 8일 ~ 15일, 추진위원회 참여 조직에서 추천한 총 19명과 통합박람회 역사관 기획위원 2인에 대한 인터뷰 진행
 - 6월 30일, 보고서 초안 작성
 - 7월 14일, 수정작업을 거쳐 최종 제출
- 인터뷰 참여자
 - 오인숙 (한국자활기업협회 회장)
 - 박기홍 (한국자활기업협회 사무국장)
 - 이문수 (지역자활센터협회 사무총장)
 - 이병학 (중앙자활센터 원장)
 - 한희주 (경기마을기업협회 회장)
 - 방태형 (경기마을기업협회 이사)
 - 구영민 (경남마을기업협회 회장)
 - 민동세 (한국사회적기업협의회 감사)
 - 이동현 (한국사회적기업협의회 공동대표)
 - 심옥빈 (한국사회적기업협의회 이사)
 - 송인창 (HBM 소장)
 - 주영덕 (전국협동조합협의회(준) 사무총장)
 - 최민경 (전국협동조합협의회(준) 사무처장)
 - 김정원 (사회적협동조합 너머 연구위원)
 - 김아영 (아이쿱조합원활동연합회 회장)
 - 김성기 (두레생협연합회 전무이사)
 - 윤형근 (한살림연합 상무이사)
 - 이현배 (성남주민신협 상임이사)
 - 문보경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운영위원)
 - 임종한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상임대표)

1. 사회적경제, 우리의 오래된 미래

아주 오래 전부터 우리 한국인의 삶에도 사회적경제가 있었다. 사회적기업육성법, 협동조합기본법이 생기기 수백 년 전에도 우리 생활 속에는 호혜와 협동의 원리가 작동하고 있었다. 전통적 협동조직인 계(契)의 시원은 삼국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농촌 사람들은 농사일의 효율적 협업을 위해 농계와 두레를 조직했고, 자녀의 혼례를 치르거나 죽은 사람을 장사지내는 비용이 부담스러웠던 서민들은 혼상계(婚喪契)를 운영했다.

사회적경제는 사회의 원리로 경제를 조직하고 운영하는 사상이며 또한 실천 활동이다. 사회의 원리란 함께 무리 짓고 관계 맺으며 살아가는 인간이, 상생을 위해서 지켜온 가치들— 상대방에게 배풀기, 서로 돕고 협력하기, 약자를 보살피고 배려하기, 공정하게 분배하기 등 —이다. 이것은 사회적 동물인 인간이 숙명과도 같은 ‘함께 살기’를 위해서 결코 저버릴 수 없었던 필연의 규칙들이다. 그래서 어떤 경제사학자의 말처럼 이 같은 사회의 원리는 애초부터 인간의 디엔에이(DNA) 속에 깃들어 있는지도 모른다.

따라서 일찍이 한국인의 역사에서 사회적경제의 모습들이 발견되는 것은 별반 이상한 일이 아니다. 사람들은 인생 어딘가에 잠복해 있는 위험과 위기를 더불어 이겨 내기 위해서, 혹은 함께 당면하고 있는 목전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서로 힘을 모으고 하잘 것 없는 자원이거나 각자 염출하였다.

이들이 어떤 문제 앞에서, 혹은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조직을 만들고 십시일반의 부조에 나섰던 것은 그것을 해결해줄 수 있는 이가 오직 같은 처지의 자신들 뿐이라는 것을 잘 알았기 때문이다. 어떠한 법이나 제도도, 국가도, 시장도, 정치지도자도 그들의 문제에 관심 갖고 귀 기울이지 않았으므로 그들은 스스로 단합해서 해결책을 궁리했다. 자조, 자립, 자발성의 원칙은 바로 이 같은 조건에서 유래한다.

혼자가 아닌 여럿이서 푼돈을 모아 자본을 마련했으므로 그것은 어떤 개인의 소유도 아닌 공동의 소유가 되는 게 마땅했다. 공동소유의 자본이니만큼 모든 구성원의 의사를 반영해서 투명하게 관리하는 것 또한 너무도 당연한 이치였다. 누군가가 돈을 많이 출자했다는 이유로 권력을 과점하려 들 때 그것을 경계하고 견제하는 것은 인 지상정이었다.

이렇듯 오늘날 사회적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운영의 핵심원리들은 매우 자연스럽게 자연발생적인 방식들이다. 특별한 누군가가 어렵사리 고안해서 남들에게 가르치고 전 파해준 무엇이 아니었다. 차라리 민중들의 집단지성이라고 하는 편이 더 정확하다.

그리하여 20세기가 저물 때까지 한국사회에는 미처 ‘사회적경제’라는 이름표는 달

지 않았으며, 사회적경제의 원리와 방식으로 추동되는 무수한 시도들이 있었다. 자연 재해를 딛고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경제사업을 일으키려니 자금이 필요했고 그런 절실한 필요를 가진 사람들이 신용협동조합(신협)을 조직했다. 농업용품과 생필품의 저렴한 구매를 갈망하던 사람들은 소비조합을 만들었고, 그것은 다시 안전한 먹을거리에 대한 욕구, 생산자와의 상생이라는 가치와 만나 오늘날의 소비자생협으로 발전했다.

치료비가 부담스러워 병원 문턱을 넘을 수 없었던 서울 낙골의 산동네 주민들은 1976년, 「난곡희망의료협동조합」을 설립했다. 국민의료보험제도가 전국화되기 전까지 이 조합은 12년간 가난한 서민들의 건강을 지켰다.

재개발사업으로 살 곳을 잃게 된 서울 양평동의 철거민들은 경기도 시흥군으로 집단 이주해서 「복음자리」라는 공동체 마을을 일구었다. 이들은 수년에 걸쳐 건축비와 땅값을 주택조합에 상환하고 자기 소유의 집 한 채씩을 마련했다.

서울 하월곡동의 일용건축노동자들은 불규칙한 노동과 저임금에 지친 나머지 「건축일꾼 두레」라는 생산공동체를 결성했다. 일하는 이들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운영하는 일종의 노동자소유기업이었다. 그게 1990년의 일이다.

한결같이, 이런 조직들의 근거가 되는 법이나 제도가 없던 시절이었다. 정부가 이런 조직을 정책적으로 육성·지원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시대였다. 하지만 이들에게 법이나 지원 제도가 없다는 사실은 하등 걸림돌이 되지 않았다. 이들에게는 눈앞의 문제, 충족해야 할 필요가 무엇보다 절실했기 때문이고, 자신들 말고는 기댈 곳이 없음을 너무도 잘 알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원래 사회적경제의 본성이 그러하듯이 한국의 사회적경제를 낳은 것 역시, 정부의 법제가 아니라 사람들의 절실한 필요와 갈망이었다. 인간답게 살려면 꼭 필요했던 것, 삶이 한 발짝 나아가기 위해 간절히 요구됐던 것— 현실이 그런 것들을 허용하지 않을 때 사람들은 스스로 나서서 자신을 돕고, 없던 길을 새로 만들어나갔다.

2. 왜 사회적경제인가?

왜 한국 정부는 2000년대에 들어 새삼 사회적경제에 눈을 돌리고 지원하는 법이며 제도를 만들었을까?

우리나라는 한국전쟁 이후 60여 년간 오로지 국가 주도의 경제 성장, 수출 증대 전략에만 매달려왔다. 고도성장의 시대에는 이 전략이 주요한 듯했으나 1990년대 말의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양상이 달라졌다. 경제성장률이 꺾이면서 저성장의 시대가

찾아왔고 장기실업과 고용불안이 일상화되었다. 여기에 저출산 . 고령화 현상이 겹치면서 국가 재정의 불균형은 더 심해졌다.

성장 전략의 낙수효과는 자취를 감추었고 처음에는 일시적 현상처럼 보였던 실업과 계층 양극화가 어느새 우리 사회에 단단히 파리를 틀었다. 민인이 정치적으로는 점점 더 평등해지는데 날이 갈수록 경제적으로는 더욱 불평등해지고 있었다.

또한 고도성장 시대의 부작용들이 사회문제로 등장했다. 환경파괴와 환경오염, 세계 최장시간의 노동, 지역공동체와 가족의 해체, 교육의 상업화, 자살률의 증가 등등은 우리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설상가상의 요인이었다.

무엇보다 사람 사이의 관계 단절이 심각했다. 예전에 혈연이나 지연으로 유지되던 사람들 사이의 관계가 끊어지면서 각자도생, 개별화의 경향이 만연했다. 이웃나라 일본에서 들려오던 무연사회(無緣社會)에 대한 고민- 연고 없는 사람들의 고독사 문제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코앞에 다가왔다.

이러한 사회문제들의 등장은 결국 시장자본주의와 성장주의 발전전략이 마침내 한계에 도달했다는 징후였다. 실은 1970년대부터 우리나라 민중들이 시도했던 수많은 사회적경제의 원형(原形)들도 성장주의 정책이 가하는 위협에 대한 나름의 대응이자 자기방어의 몸부림이었다.

점차 저성장과 저고용, 빈부격차와 고령화는 더 이상 신자유주의 경제 정책, 박정희식 근대화 전략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게 분명해졌다. 그리하여 유럽 국가들이 실업과 사회적 배제, 커뮤니티의 쇠락 등을 속수무책으로 바라보던 끝에 사회적경제 부흥정책이라는 칼을 빼들었듯이, 한국 정부 역시 앞서의 문제들에 대한 해결 희망을 사회적경제에서 구하기 시작했다. 제도화의 시초는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자활공동체(현재의 자활기업)의 육성을 명시한 것이었다.

이후 사회적기업, 협동조합의 관련법이 제정되고 마을기업과 농어촌공동체회사지원정책이 확대되면서, 성격이 비슷비슷한 모두를 묶어서 '사회적경제'로 통칭하는 관습이 생겼다. 유럽에서 사용하던 용어(Social Economy)를 들여와서 부처별로 관리하던 조직유형들을 한 바구니에 담기 시작했다.

그러나 앞서서도 강조했거니와, 사회적경제는 단순히 자활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및 마을기업의 합집합이 아니다. 정부 제도가 규정한 이들 조직유형을 포함하기는 하지만 그보다는 훨씬 넓은 범주를 아우르는 것이다. 사회적경제는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목표로하고 사회적경제의 핵심원리를 따르는 모든 자발적 결사체를 일컫는 개념이어야 한다. 사회적경제 조직은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 . 교환 . 분배 . 소비하는 활동을 통해서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고자 하는 조직이다.

그렇다면 오늘날 한국의 사회적경제는 실업과 빈곤과 양극화의 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는가? 정부 통계상 사회적경제기업의 종사자가 모두 36만여 명이라고 하니 그 수만큼의 일자리가 만들어졌다고 할 수 있지만, 그로 인해 우리나라의 실업률이 내려갔거나 실업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실업이나 빈곤의 규모는 거시적 경제·사회 구조의 변동에 의해서, 복합적 요인들의 작용으로 결정되므로, 작은 규모로 아주 천천히 생성되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일자리가 그 모든 공백을 메울 수 있다고 믿기는 어렵다. 사회적경제를 오래 연구해온 학자들 가운데도 “사회적경제 조직이 고용에 미치는 효과는 간접적인 것이며 일자리 창출을 위한 보편적 정책수단은 아니”¹⁾라거나 “사회적경제가 많은 잠재력을 갖고 있지만 그것의 임무가 실업이나 그 밖의 시장경제의 실패로 인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은 아니”²⁾라고 지적하는 이들이 있다.

하지만 위의 주장이 사회적경제 정책의 가치나 잠재력을 부정하는 것은 물론 아니다. 사회적경제 정책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뜻이 아니라, 오히려 대안적 이념인 사회적경제를 단지 고용정책의 수단으로 도구화해서는 안 된다는 경고이다.

여기서 하나의 국가 정책이 어떤 문제의 해결을 지향하고 목표한다는 것(담론의 차원)과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실질적 효능을 갖는다는 것(과학적 사실의 차원)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 정부의 정책결정자가 이 두 가지 차원을 혼동하게 되면 사회적경제의 진정한 의미와 가능성을 간과한 채, ‘몇 개의 일자리를 만들어냈는지, 소득을 얼마나 끌어올렸는지’만으로 모든 걸 평가함으로써 사회적경제를 수단화해버리는 우를 범하기 쉽다.

사회적경제는 우리 사회의 운영 원리를 경쟁과 승자독식의 자본주의로부터 새로운 패러다임-공생과 호혜 및 협동의 가치체계-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사상이고, 동시에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실천 활동이다. 달리 말하면, 자본이 아닌 인간을 중심에 두는 살림살이의 경제로 나아가겠다는 가치 지향이다. 그런 한에서 실업, 빈곤 및 불평등의 해소는 사회적경제가 신자유주의 너머의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다른 정책들과 함께 부분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하나의 결과 영역일 뿐이다. 아마도 공생의 관계 회복, 포용과 배려의 정신, 그리고 생활 속의 민주주의가 살아나지 않는 속에서는 설사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맞이한들 현재의 우리 삶이 더 나아진다고 장담하기 어려우리라.

1) Westlund, Hans (2003), “Social Economy and Employment—the Case of Sweden”, *Review of Social Economy* LXI(2), p. 180.

2) Laville, Jean-Louis (2003), “A New European Socioeconomic Perspective”, *Review of Social Economy* LXI(3), p. 389.

3. 사회적경제의 성과와 문제점

지난 10여 년 사이에 한국에서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빠르게 늘어난 것은 분명 긍정적인 변화다. 당사자인 주민들로 구성된 사회적경제기업과 그들 간 네트워크의 숫자가 2000년대 초반과 비교하면 괄목상대할 수준으로 증가했다. 필요를 가진 당사자들이 자립적으로 해결하고자 경제공동체를 만드는 움직임이 그만큼 확산됐다는 증거다.

또한 경제활동의 주체도 다양해졌다. 자활공동체 시절에는 주로 저소득 취약계층으로 한정돼 있던 참여자들이 이제는 일반기업의 퇴직자나 청년, 주부 등으로 다채로워졌다. 무엇보다 맘 흘려 일하는 노동자들이 기업의 소유자 내지 경영자로서의 정체성을 갖게 됐다. 단지 일거리를 찾아 사회적경제기업에 발을 들여놓았던 참여자들 가운데는 역량이 자라서 조직의 지도자로 성장한 사람들도 생겨났다.

민간 네트워크들이 조직되면서 지역 단위에서 민과 관이 함께 협의하는 회의체도 상설화되었다. 당사자 조직들의 네트워크 활동이 활발한 곳에서는 지자체가 그들의 존재를 의식하고 민관거버넌스 구성에 적극 나서기도 하였다.

이와 함께 시민들의 인식도 변했다. 이제까지와는 다른 방식의 경제, 다른 방식의 삶이 가능하다는 생각이 싹트기 시작했다. 작게나마 사회적경제의 필요성에 대한 인정과 공감대가 자리 잡게 되었다. 또한 장애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의 노동시장 진입 장벽이 조금 낮아지는 효과도 나타났다. 사회복지체계가 사회적경제를 통해서 혁신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발견한 사람들도 생겼다.

이런 변화들이 나타난 데는 법을 제정하고 지원제도를 운영해온 정부의 역할이 무엇보다 컸다. 국민 인식의 변화도 전국으로 뻗은 제도화의 경로를 타고 좀 더 수월하게 일어난 면이 있다. 사회적경제가 정부 국정과제의 하나로 다루어지면서 관련 정책들이 국민생활에 미친 파급 효과는 제도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광범했다.

물론 사회적경제기업을 꾸려가는 당사자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이 같은 성과를 낳은 1차 원동력이었음은 두말 할 나위도 없다. 절실한 필요를 해결하려는 본인들의 자구적(自救的) 열정이야말로 자동차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엔진의 힘과 같기 때문이다. 이상이 한국의 사회적경제 부문이 지금까지 이룩한 성과라면 현재 당면하고 있는 문제나 어려움은 없을까?

첫째, 민간 당사자 조직들의 주체성이 약한 반면, 정부의 주도성이 너무 강하다는 문제가 있다. 앞에서 사회적경제의 저변이 단시간 내에 확대될 수 있었던 데는 지원

에 적극적이었던 정부의 공이 크다고 했지만, 이는 역설적으로 정부가 사회적경제 주체들의 자주성을 약화시켰다는 비판도 가능케 한다. 여기서 ‘당사자 조직의 주체성이 약하다’는 문제는 여러 가지 상황에서 여러 가지 모습의 현상들로 나타나는데, 이를 테면 다음과 같은 경우들이다.

- i) 당사자 조직들이 정부의 사회적경제 정책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고 조건 없이 따른다. 사회적경제의 기본정신과 원칙에 입각해서 정부와 대화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순응하는 경향이 있다. 이때 정부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모두를 가리키는데, 대개는 민관협의기구의 감투와 돈(지원 예산)이라는 권력을 가진 정부관계자와 갈등을 빚지 않으려는 심리가 작용한 결과이다.
- ii) 당사자 조직들의 연합체 차원에서 필요한 법제와 정책을 선제적으로 고민하고 판단해서 먼저 정부에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늘 정부가 발표한 정책이 원만히 실행되도록 협조하는 데 급급하다.
- iii) 개별 당사자 조직들은 시장에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 혁신적으로 사고하며 새로운 전략을 고민하기보다는 정부 보조금 등에 의지해서 근근이 꾸려나가려는 경향이 있다. 사회적경제 차원의 큰 활로를 모색하기보다는 자기 조직의 경영에 매몰되어 각개약진 하는 성향을 보인다.
- iv) 사회적 가치, 창립 당시 설정했던 미션과 목적 등에 비추어 자기 기업이 사회적경제 조직으로서의 본분을 다 하고 있는지 성찰하지 않고 재무적 성과를 내는 데만 골몰한다. 사회적경제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망각한 채 비즈니스 조직으로서 생존하는 데만 힘쓰는 것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사회적경제기본법안」의 진행 과정을 보면 우리나라 당사자 조직의 처지가 얼마나 허약한지가 단적으로 드러난다. 2013년, 19대 국회에서 사회적경제기본법안이 처음 발의된 이래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사회적경제 당사자 조직들은 ‘왜 사회적경제기본법을 제정해야 하는가’에 관해서 한 번도 골똘히 생각해본 적이 없다. 제대로 고민해볼 기회조차 갖지 못했다.

정치인들은 기본법의 제정을 일찌감치 기정사실화 해놓고 있었다.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들은 한결같이 기본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려놓고 자신들의 인(案)에서 혹시 빠진 내용이 없는지,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에 뒤늦게 물어왔다. 결국 기본법 제정에 대해 한 번도 ‘왜’라는 관점에서 생각해본 적 없

는 연대회의는 정치인들의 일정에 맞춰 ‘어떻게’를 채워나갈 수밖에 없었다. 당시 연대회의 임원들 입장에서는 ‘법 우선주의’ 논리가 지배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달리 대응할 여지가 없었던 것이다.

법 제정의 필요성에 관해서는 몇몇 연구자들이 ‘부처 간 칸막이 행정으로 인한 비효율성을 개선하고 통합지원관리를 하기 위함’이라는 명분을 이미 제공해놓고 있던 터였다. 당사자끼리의 충분한 숙의 과정이 없는 졸속함을 문제 삼거나 ‘법이 제정되면 무엇이 달라지는가’를 따지던 소수의 사람들은 점차 입을 다물었다. 좋은 취지를 일부러 외면한 채 반대를 위해 반대하는 사람으로 찍히기 십상인 분위기 때문이었다.

현장의 사회적경제기업 종사자들 사이에는 ‘뭔지 몰라도 법이 제정되면 하나라도 좋아지는 게 있겠지’하는 기대와 ‘법이 만들어져도 우리에게 달라질 것은 하나 없다’는 냉소가 교차했다. 그래서 기본법 제정은 정치권력에 가까이 있는 이들에게는 ‘절실한 필요’였지만, 현장 조직들은 아무도 그것이 ‘우리를 위한, 우리의 법’이라고 느끼지 않았다. 이렇게 제출된 법안은 여전히 국회의 정치판도 변화에 운명을 맡긴 채 속절없이 세월을 보내고 있다. 처음의 입법 취지조차 무망한 채로.

이것을 이탈리아 사회적협동조합법의 제정 과정과 비교해보면 주체성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극명하게 드러난다. 이탈리아의 사회운동가들은 1970년대 말부터 빈곤과 사회적 배제를 책임지는 협동조합의 새로운 법구조를 고민하기 시작했다. ‘확대된 공익성’을 담기 위해서는 다중이해관계자 구조의 새로운 협동조합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으고 실제로 전국에서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해나갔다. 이렇게 만들어진 사회적협동조합의 수가 1985년 전국 집회 때는 550개에 이르렀고, 이런 추세 속에서 지방자치단체들은 중앙정부에 앞서 사회적협동조합을 위한 제도들을 마련했다. 그리고 당사자 조직들의 줄기찬 요구에 의해서 정식으로 사회적협동조합법이 제정된 것은 1991년이였다.

정부와 당사자 조직 모두가 우리와는 사뭇 다른 태도로 다르게 행동했다. 그야말로 밑에서부터 위로, 철저히 상향식의 경로를 따랐다. 한 가지 서글픈 것은 이런 차이를 두고 우리나라의 일부 논자들이 ‘한국적 특수성’을 거론하면서 하향식 법제화를 당연시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사족: 혹여라도 이상의 논의가 기왕에 발의된 기본법 안조차 통과되면 안 된다는 뜻으로 오해되지 않기를 바란다)

현실이 이러하므로 (중앙 또는 지방) 정부와 민간의 당사자 조직이 대등한 위치에서 진정한 의미의 민관거버넌스를 이루지 못한다는 두 번째 문제가 대두된다. 형식적으로는 전국에 수십 개의 사회적경제 민관협의기구가 존재하지만 양자 간에 실질적 협의가 이루어지는 곳은 잘 찾아볼 수 없다. 요식행위처럼 이따금씩 회의를 개최되고, 그나마도 정부가 이미 확정된 계획을 알리고 협조를 구하거나 결과에 대한 정보

를 공유하는 차원의 회의가 대부분이다. 정부기관이 당사자 조직들과 함께 계획을 세우고 실행의 책임을 분담하는 식의 민관파트너십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

정부기관 공무원들의 태도의 기저에는 민간부문 관계자를 함께 일을 도모하는 동반자라기보다 자신들이 주관하는 업무를 보조하는 자, 자신들이 기획한 것을 실행하는 자 정도로 여기는 인식이 깔려 있다. 그리고 사회적경제 담당 공무원들에게서는, 예외적 일부를 제외하면, 사회적경제에 대한 깊은 이해와 활성화에 대한 의지를 좀처럼 발견하기 어렵다.

사회적경제를 기존 정책의 도구로만 여기는 정부기관의 협소한 관점은 그들로 하여금 늘 단기적 성과에 집착하게 만든다. 그들은 보다 민주적인 미래 사회를 향한 큰 그림 속에서의 종합적 평가보다는 당장의 가시적 성과, 전시효과에만 관심 있어 한다. 자연히 미래를 위한 장기적 투자는 일어나지 않는다.

세 번째로, 자기 성찰과 혁신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당사자 조직들의 문제도 결코 가볍지 않다. 정부가 배분하는 자원을 쫓는 데 열심인 반면, 타성을 벗기 위한 자기 성찰에는 소홀하다. 사회적경제의 핵심요소인 자발성과 자주성이 약한 조직들이 자주 발견되고 이에 대한 당사자들의 위기의식도 열은 편이다. 제도화되기 이전에 있었던 성향-스스로를 돕고자 전심전력하는 태도의 중요성은 퇴색하는 분위기이고, 사회적경제 1세대 중에는 기득권에 안주하려는 모습도 보인다.

그리고 자기 조직에만 몰입하는 경향은 연대와 협동을 어렵게 한다. 실제로 사회적경제 조직들 사이의 연대와 협력이 잘 안 되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자기조직 이기주의가 그 하나라면, 조직 간의 다름을 존중하거나 갈등을 원만하게 풀어본 경험이 없다는 것 또한 다른 이유다. 연대를 위한 그간의 모임들이 시간만 축내며 별 소득 없이 끝났다는 부정적인 기억도 협동의 기운을 떨어뜨리는 세 번째 이유다. 그래서 협동과 연대를 생명으로 여겨야 하는 사회적경제기업들이 현실에서는 서로 힘과 뜻을 모으는 데 매우 소극적이다.

마지막으로, 사회적경제의 발전 정도와 정책적 환경에서도 지역 간의 격차가 크게 벌어져 있다. 지방이 침체되는 것을 막아야 할 지역의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또 한번 자원의 접근성과 기회의 불균형으로 인해서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 사회적경제의 생태계에서도 수도권 편중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4. 오래된 미래를 향한 우리의 과제

1) 정부는

사회적경제가 단지 일자리 정책의 한 수단이 아니라 인간관계가 복원되는 새로운

사회의 운영원리가 되어야 함을 인식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단기적이고 가시적인 성과에만 매달리지 말고, 미래사회에 대한 발전전략으로서 사회적경제의 장기적 비전과 단계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정부와 민간의 당사자 조직이 대등한 동반자로서 실질적 의미의 협치가 일어날 수 있는 민관거버넌스가 구축되어야 한다. 현재와 같이 겉치레에 불과한, 그리고 민간 참여자가 정부관계자의 보조자 내지 협력자에 머무는 작금의 구조는 개혁돼야 마땅하다. 만약 (청와대부터 지자체에 이르기까지) 사회적경제 정책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모든 단위에서 민간의 의견과 실천의지가 충분히 반영된다면 지금의 많은 문제들이 풀리고 진척 속도도 빨라질 것이다.

정부 공무원들의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해와 애정이 깊어진다면 역시 많은 어려움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공무원에 대한 효과적인 사회적경제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타율적이고 형식적인 집체교육은 교육 참여자의 인식 변화를 전혀 가져오지 못한다는 사실도 명심해야 한다. 생각과 태도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지속적이고 심도 깊은 교육 계획을 세우고 실행해야 한다.

사회적경제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인사 제도도 마련될 필요가 있다. 순환근무제에 따른 잦은 인사이동으로 사회적경제 담당자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지속적으로 축적되지 않는다. 이로 인해 지자체와 사회적경제기업들 간의 관계가 수년 씩 제자리에서 맴도는 경우들도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관 제도나 개방직 공무원 채용제도의 적용을 고려해볼직하다.

2) 민간의 당사자 조직은

자신들의 힘을 키우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여기서 힘이란 자신의 도덕적 정당성에서 오는 권위와 조직의 세력이란 차원을 모두 포함한다. 오늘날 사회적경제의 기본정신과 철학을 잇고 관성에 젖어있는 조직들이 적잖게 생겨난다. 협동과 연대의 원칙은 아랑곳없이 영리기업처럼 행동하는 경우도 다반사다.

사회적경제의 근본을 돌아보고 반성하는 성찰과 자정(自淨)의 움직임이 절실히 필요하다. 자기 정체성을 상실한 조직은 도덕적 정당성을 갖기 어렵고 결국 정부와의 협상에서도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성찰과 자정의 운동은 누군가가 다중을 향해 잣대를 들이대며 문제를 일거에 해결하려는 방식이 아니라, 필요에 공감하는 당사자 그룹이 자발적으로 조용히 실천해나감으로써 눈덩이 커지듯 서서히 확산되는 운동이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약속을 구체적인 실천지침-가령, 해야 할 것과 하

지 말아야 할 것 5가지-으로 정리하고, 이것을 공유하며, 이를 실천하는 조직들은 서로 지지하고 격려하는 관계의 네트워크로 모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공동의 실천지침들 가운데 하나로서 자기 조직의 사회적 성과를 주기적으로 평가해서 공개하겠다는 약속을 포함하는 것도 방법이다. 하나의 평가도구를 정해 놓고 그것을 이용해 자기 조직의 미션과 목적 등에 비추어 어떤 내용의 사회적 가치를 얼마만큼 산출하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진단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는 것을 자기 의무화 하는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정부의 실천 과제는 민간이 아무리 말로 설득하고 촉구해도 그것만으로는 정부를 변화시킬 수 없다. 당사자 조직들이 실제로 힘을 갖고 힘을 보여주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상에서 협력과 연대를 실천하는 관행을 만들어내야 한다.

첫째, 지역에서 유의미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 데 집중해야 한다. 그리고 성공적인 모델 혹은 사례를 사회적경제 조직들끼리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확산해야 한다. 성공사례를 발표하고 분석하는 워크숍은 연대의 당위성 때문에 목적의식적으로 조직돼온 종래의 회의체들에 비해서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 연대는 사업을 매개로 이루어져야 한다. 일정지역의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사업을 함께 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조직하고 키워야 한다. 이러한 사업 연합체는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고 일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동종업체끼리 모이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하나의 큰 사업(예컨대, 공공재정 사업)을 함께 수행하기 위해서 다양한 업종의 사업체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도시재생과 같은 인접한 영역과의 협력사업 또한 적극 모색하고 개발함으로써 사업 영역을 확장해야 한다. 사업을 매개로 한 네트워크 역시 참여 기업들이 연대의 효용을 직접 체감하게 돼있으므로 비교적 안정적인 유지가 가능할 것이다.

셋째, 이상의 연대는 조직유형 간의 경계를 허무는 방식이 되어야 한다. 사회적기업들끼리, 혹은 협동조합들끼리의 연대가 아니라, 조직유형이나 소관부처에 상관없이, 오로지 사업적 필요성에 의해서 결합되는 관계여야 한다. 물론, 같은 조직유형들의 협의체도 필요하긴 하지만, 협력의 대상을 사회적경제 조직 전체로 열어놓을 때 비즈니스 측면의 실질적 역동이 일어날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

지역에 사회적 금융의 기반을 구축하는 것도 앞으로 민간에서 해야 할 중요한 과제다. 정부가 계획 중인 전국 차원의 금융 전달체계만 바라보지 말고, 기존의 금융기관들 가운데 각 지역에서 사회적 금융의 중심 노릇을 할 곳을 찾아서 지역의 독자적인 자조기금 체계를 만드는 노력이 필요하다.

3) 중간지원기관은

자기 역할을 재정립하고 지원체계를 재편해야 한다. 정부 재정으로 운영되는 중간 지원기관들은 매우 다양한 종류의 업무를 이것저것 다 하고 있지만, 현장 조직의 실질적 필요와 요구에 얼마만큼 부응하고 있는가라는 관점에서는 개선해야 할 여지가 많다.

중간지원기관의 기능 중에는 행정기관이 해도 좋을 단순 업무부터 지자체 주관 행사의 대행 내지 보조에 이르기까지 당사자 조직들에 대한 실질적 도움과는 거리가 있는 잡다한 일들이 포함돼 있다. 컨설팅이나 네트워크 지원 같이 정작 사회적 경제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일을 하기에는 구성원들의 수준이 기대에 못 미칠 뿐 아니라 많은 업무량 때문에 시간적 여유를 갖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역할에서의 선택과 집중이 불가피하다. 가장 중요한 역할은 당사자 조직들의 사업 네트워크 조직화를 지원하는 일이다. 사업 연합체를 조직하고 운영하는 일은 당사자 조직들만의 역량으로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다. 사업에 관련된 정보와 아이디어를 찾고 개발하는 데는 시간과 전문지식이 요구될 것이다. 또한 흩어져 있는 당사자 조직들을 모으고 연결하는 데도 신뢰의 관계를 구축해가는 지속적 접촉이 필요하다. 이런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들의 일터로서 중간지원기관이 다시 자리매김 되어야 할 것이다.

5. 맺으면서

외국에서 사회적경제라는 이름을 수입해오기 전부터 우리에게서 그것의 본질을 실행해온 전통이 있다. 우리는 그 전통이 지녔던 건강함을 거울삼아 현재의 우리 모습을 비쳐보아야 한다. 그 건강함의 문화 속에는 우리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올바른 방침이 들어있다.

사회적경제 당사자 조직은 그간 소홀했던 협동과 연대의 원칙을 되살려내야 한다. 실사구시의 정신으로 작은 협동들을 실천하면서 큰 연대의 경험을 쌓아올려야 한다. 그리하여 언젠가 민간부문의 연합체는 정부의 피동적 대화상대에 머물지 않고, 스스로 결정하고 요구하며 관리하고 배분하는 책임 있는 실제로 성장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협동조합 운동의 발원지 가운데 하나인 원주에서는 이런 제안이 들린다: 과거 시대에 혈연, 지연, 학연이 기능하던 자리에 이제는 협연(協緣)-협동으로 맺어진 인연-을 채워 넣으면 어떻겠느냐고. 불평등과 차별의 칼바람이 자꾸 거세지는 세상에서 인간답게 사는 길은 사람 관계의 끈을 열심히 이어서 민주주의의 집을 짓는 것일지도 모른다.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2019년 4월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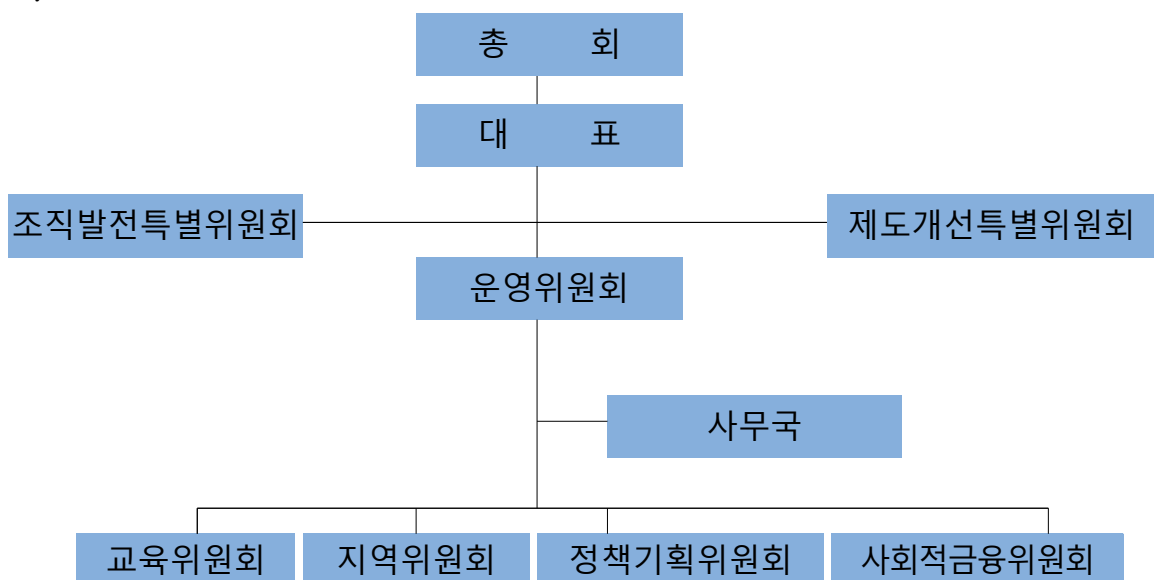
1.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출범 배경 (참고1. 출범선언문)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협동조합기본법’ 제정을 위해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협동조합기본법제정연대회의>와 ‘사회적기업육성법’의 올바른 제정을 위해 구성되어 활동한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가 통합된 조직으로, 2012년 11월 21일 출범하였습니다. (2017년 2월 명칭변경. 구 한국협동사회경제연대회의)

연대회의는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자활 등 사회적경제 영역에서 활동하는 제 단체들이 연대하고 협력하는 네트워크 조직으로서 한국의 사회적경제운동의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한살림연합회,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일하는사람들을위한협동조합연합회 등 20개의 부문.업종연합조직(협의회)와 전북협동사회연대회의, 충북사회적경제협의회, 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등 14개 지역연합조직을 포함해 총 55개 단체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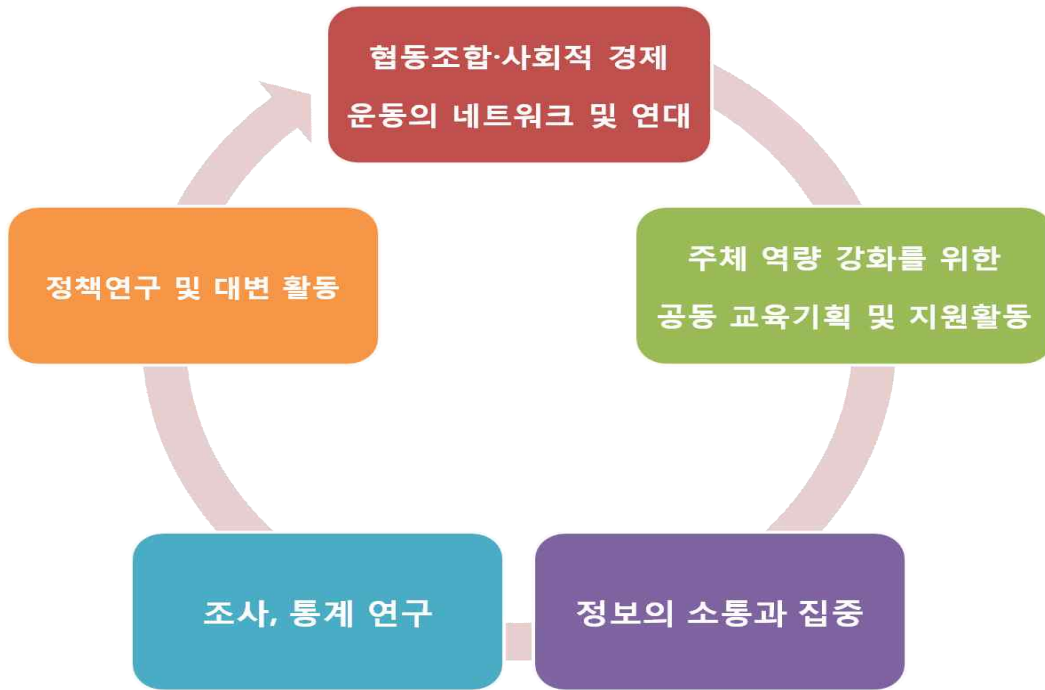
2. 조직도



3. 공동대표단 및 운영위원

<p>공동대표 (7명)</p>	<p>서울지역협동조합협의회 유영우 전국자활기업협의회 오인숙 주민신협 이점표 생협 미정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변형석 충남사회적경제협의회 김혜경 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김종현</p>
<p>운영위원 (15명)</p>	<p>iCOOP조합원활동연합회 박인자 경기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협의회 최현수 사회투자지원재단 문보경 마이크로크레딧 신나는조합 박향희 일하는사람들의협동조합연합회 박강태 전북사회적경제연대회의 육이수 충북사회적경제협의회 하덕천 한겨레두레협동조합연합회 김경환 한국가사노동자협회 최영미 한국대학생활협동조합연합회 김진아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민 앵 한국협동조합연구소 김기태 한살림생협연합 정규호 행복중심생협연합회 강은경 연대회의 집행위원장 안인숙</p>
<p>정책기획위원회 교육위원회 사회적금융위원회 지역위원회 제도개선위원회 조직발전위원회 연구(자)네트워크</p>	<p>위원장 강민수 외 10개 조직 위원장 박봉희 외 11개 조직 위원장 문보경 외 10개 조직, 분과 1개 위원장 하재찬 외 11개 조직 위원장 김기태 외 위원 13명 위원장 변형석 외 9명 7개 조직</p>
<p>사무국</p>	<p>사무국장 박용원</p>

4. 주요 활동



5. 주요 연혁

2018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을 위한 시민행동 전국대회
사회서비스 정책포럼
사회적경제 정책포럼
제4회 사회적경제 활동가대회
사회적경제박람회 2018 사회적경제 보고서 제출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부정책 중간점검 보고서 제출

2017

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적위원회 자문위원 참여
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적위원회 출범식 참석
19대 대선 정책요구안 마련
19대 대선후보자 사회적경제 정책 협약식
문재인정부 사회적경제 정책 특별 토론회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을 위한 시민행동 출범
사회적경제금융활성화 방안 제출

2016

협동조합 제2차 기본계획 정책토론회
총선 및 20대국회 정당 공동공약 민간대표 요구안 확정 및 토론회 개최
총선 및 20대 국회 대응 간담회 및 전달식
장기 민간역량 강화 정기포럼 (1~3차)
사회적경제 부문·업종·지역 간담회

2015

정책포럼 “지역단위 사회적경제조직간 연대조직의 자생력 강화 방안” (1~4차)
협동조합 주간행사 연대회의 주최 토론회 “우리 안의 미래“-협동조합의 도전과 과제
성명서 발표 “원칙과 약속을 지키는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논의를 촉구한다”
-경제재정소위 논의 무산에 대한 민간 사회적경제진영의 입장
서울시 사회적경제 5개년 계획 수립을 위한 간담회
전국 사회연대 지방정부협의회 간담회
2016년 지역 사회적경제 시책 수립을 위한 워크숍 1~2차 (춘천, 전주)
총선공약개발을 위한 사회적경제 우수 정책사례 설명회

2014

국회 협동조합 활성화포럼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정의당의 사회적경제위원회 활동
6.4 전국동시지방선거 전국사회적경제 매니페스토 실천협의회
Bruno Roelants(CICOPA 사무총장) Mikel Lezamiz(몬드라곤 협동조합 홍보) 초청간담회
미래부, 연구재단과 사회적 격차 해소 기술연구사업
“사회적경제 진영이 사회적경제를 논하다” 릴레이토론회
사회적경제기본법 전국 순회 간담회
한국협동사회경제연대회의 사회적경제기본법안 제출
국회 기재위 사회적경제기본법 공청회 참석

2013

서울시 협동조합 상담지원센터 컨소시엄 구성
협동조합의날 기념식 및 협동조합주간행사 공동조직위원회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금융의 역할 토론회
국제사회적경제포럼(GSEF2013), 캐나다 퀘벡 상티에 초청
-“상티에의 경험을 통한 협동사회경제연대회의의 발전 전망 모색” 강연 및 토론회
협동조합기본법 개정안 발의 국회의원, 한국협동사회경제연대회의 합동 기자회견
전국 협동사회경제 활동가대회 - 협동사회경제의 '지금 선 자리, 갈 길'

2012

제18대 대통령선거 사회적경제 의제 제안
한국협동사회경제연대회의 창립총회

참고1.

한국협동사회경제연대회의 출범선언문

- 협동과 연대로 더 나은 세상을 향하여 -

오늘날 지구촌 곳곳에서 사회적경제에 대한 관심이 크게 늘고 있다. 이유는 이윤 추구가 최대 목표인 자본 기업이 중심이 되어 이끌어온 세계 경제가 세상을 심각하게 병들게 했기 때문이다. 부의 집중으로 양극화는 심화되었고 굶주리는 사람은 더 늘었다. 노동자들은 실업과 해고의 위협으로 시달리고 있다. 급기야 ‘묻지마 살인’과 같은 심각한 사회 병리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이런 사회적 위기 속에 사회적경제는 자본가, 투자자의 이윤을 위한 경제 활동이 아니라 협동조합, 공제조합과 같이 조합원의 필요나 사회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경제 행위를 한다. 국가의 전체 경제에서 사회적경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 편에 속하는 스웨덴, 덴마크 등 북유럽의 나라들이 제일 살기 좋은 나라로 꼽히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우리 사회에 사회적경제라는 영역이 등장한 지는 오래되지 않았다. 사회적경제의 한 분야인 소비자협동조합은 일제 침략기인 1920년대에 출범하여 활발하게 진행되다가 총독부의 탄압으로 막을 내렸다. 이후 해방과 군사 독재시대를 거치면서 민간 소비조합이 여러 차례 시도되었지만 활성화되지 못했다. 반면, 정부가 정책적으로 개입하고 육성지원한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새마을금고는 조합원의 호혜와 자율 운영이 실종된 채 양적으로 성장했다. 협동조합을 제외한 사회적경제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진행되었다. 노동자들이 실업을 극복하기 위해 스스로 조직을 만들고 자활단체를 시작했다. 그리고 2007년에 정부가 사회적 기업을 지원하는 법을 시행하면서 본격적으로 사회적경제가 등장하였다.

이런 가운데 “세계 협동조합의 해”인 2012년은 한국의 사회적경제, 협동조합 운동에서 큰 자취를 남긴 해다. 12월 1일부터 시행되는 협동조합기본법으로 노동자, 소비자, 농민, 자영업자 등 누구나 5인 이상만 모이면 협동조합을 만들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 동안 한국에는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신협, 생협 등은 있었으나 노동자협동조합을 비롯하여 다양한 협동조합을 만드는 길은 막혀 있었다. 그래서 2007년부터 시작된 사회적 기업도 협동조합으로 하지 못하고 주식회사와 같은 상법상의 기업 또는 사단법인 등의 형태로 해야 했다. 협동조합기본법의 제정으로 사회적 기업, 자활기관 등 여러 사회적경제 주체들이 협동조합이라는 적합한 옷을 입고 사업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간 민간은 2007년 사회적기업육성법이 제정, 시행되자 사회적경제에 대한 대중의 이해를 높이고 정부 대응력을 갖추기 위해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를 만들고 2011년에는 협동조합기본법을 만들기 위해 ‘협동조합기본법제정연대회의’를 조직하여 활동해왔다. 이제 협동조합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두 조직이 “한국협동사회경제연대회의”라는 이름으로 새로 출범하고자 한다. 두 조직을 통합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협동조합을 비롯한 사회적경제 조직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둘째, 사회적경제에 속한 조직들이 서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서다. 셋째, 정부와 소통하는 창구를 효과적으로 만들기 위함이다.

오늘 출범하는 연대회의는 특히, 사회적경제 현장 조직들이 성공하고 중심이 되도록 지원할 것이다. 아울러 각 분야의 연합 조직이 튼튼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 이제 자본 중심의 폭주하는 기관차는 멈추어야 한다. 그래야 아름다운 푸른 별 지구가 보전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자본 중심의 경제에서 벗어나 사람이 중심이 되는 경제가 되어야 한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모두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다.

2012년 11월 21일

한국협동사회경제연대회의

참고2.

회원단체 조직현황

구분	단체명	대표자	주소
1	(사)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	이경란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 114 201호
2	나눔의집협의회	최준기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19길 16
3	두레생협연합회	김영향	서울시 구로구 가마산로 291 KT텔레캅빌딩 4층
4	iCOOP소비자생활협동조합 사업연합회	박인자	경기도 군포시 공단로149, 401호 (당동, 아이밸리 군포)
5	전국주민협동연합회	정덕용	서울시 중구 다산로 18길 29 중앙빌딩 1층
6	한국자원순환사회적협동조합	박준우	서울시 노원구 상계로23길 4, 덕일빌딩 2층
7	한겨레두레협동조합연합회	김상현	서울시 종로구 필운대로 12 2층
8	한국가사노동자협회	최영미	서울시 영등포구 양산로 97 4층
9	일하는사람들의협동조합연합회	박강태	서울 은평구 통일로 684 서울혁신파크 미래청 열린사무실 5호
10	한국대학생활협동조합연합회	김진아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3길 36 2층
11	한국돌봄사회적협동조합	안혜경	서울 영등포구 선유동1로 80 영등포사경지원센터 301호
12	한살림연합회	조완석	서울시 서초구 서운로 19 4층
13	한국여성노동자회	임윤옥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 162-5
14	한국의료복지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경창수	서울시 은평구 통일로 684 18동 306호
15	(사)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박준홍	서울시 중구 다산로 18길 29 중앙빌딩 1층
16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변형석	서울시 은평구 통일로 684 제1동 1층
17	행복중심생협연합회	강은경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 271 벽산디지털밸리 3차 208호
18	(사)전국실업단체연대	최인규	서울시 중구 정동 22 경향신문빌딩 15층
19	한국YMCA전국연맹	김흥수	서울시 마포구 잔다리로 68
20	전국학교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김홍섭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3길 36 2층
21	한국자활기업협회	오인숙	서울시 중구 다산로 18길 29 중앙빌딩 1층
22	한국마을기업중앙협회	김대형	세종시 전의면 운주산로 1197
23	통합지원기관전국협의회	김재경 주태규	대구광역시 중구 국제보상로 489, 유창빌딩 5층(동산동 11-4번지)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사운로 226, 운천빌딩 5층(운천동)
24	전북사회적경제연대회의	송병주	전북 전주시 덕진구 팔과정로 164, 경제통상진흥원 본관6층
25	(사협)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우순자	강원도 원주시 원일로 137
26	충남사회적경제협의회	김혜경	충남 공주시 공주대학로 56 산학연구소 503호
27	충북사회적경제협의회	하덕천 이혜정 남기현	충북 청주시 흥덕구 흥덕로 159 BYC 빌딩 2층
28	경기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협의회	최현수	경기 남양주시 흥유릉로 248번길 39, 다남프라자 304호
29	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김종현	제주시 중앙로 165 제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 1층
30	대경협동경제네트워크 (사협)	박송목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862 2층
31	(사)풀뿌리사람들	송인준	대전시 중구 대흥로10번길 9

	구분	단체명	대표자	주소
32		경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	박진해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 32-7
33		커뮤니티와 경제	김재경	대구시 중구 국제보상로 489 유창빌딩 5층
34		사회적협동조합 사람과 세상	주태규	경기 수원시 영통구 동탄지성로 470번길 34, 상가 2층
35		서울지역협동조합협의회	유영우	서울시 은평구 통일로 684 1동 1층
36		사회적경제연구원	유승민	대전시 중구 보문로293 협동의집 3층
37		경기지역협동조합협의회	이점표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115-1 상가 101호
38		(사협)울산사회적경제지원센터	문흥석	울산시 중구 신기8길7 2층
39		사회적협동조합 살림	이종국	광주시 서구 상무중앙로 43 BYC빌딩 7층
40		사람과경제	하재찬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사운로 226 운천빌딩 5층
41		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	이강익	강원도 원주시 호저로 47 B109
42		경기도마을기업협회	한희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610번길 21 1층
43		사단법인 상생나무	김종익	전남 무안군 삼향읍 후광대로 282, 전문건설회관 3층
44		전문 기능 조직	사회연대은행(사)함께만드는세상	김성수
45	사회투자지원재단		김홍일	서울시 노원구 상계로 23길 4, 2층
46	성공회대사회적기업연구센터		이영환	서울시 구로구 연동로 320 성공회대학교내
47	사)한국마이크로크레디트신나는조합		정명기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107-39 사조빌딩 200호
48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김성재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2 이룸센터 303호
49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진남영	서울시 영등포구 선유동1로 33, 3층
50	(사)한국협동조합연구소		최영찬	세종시 조치원읍 터미널안길 60 고용복지플러스센터 7층
51	(재)함께일하는재단		송월주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6길 36번지
52	(사)환경정의		김일중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로 26길 39 시민공간나루 2층
53	(주)한국사회혁신금융		이상진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일로12길 20, 606호, 607호
54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너름		장경호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2가 80-2 풍양빌딩 2층
55	(사)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이재욱	서울시 종로구 대학로1길 34-3
56	단위 조직		논골신용협동조합	유영우
57		동작신용협동조합	안재남	서울시 동작구 상도로 179
58		주민신용협동조합	이점표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115-1
59		장안신용협동조합	안병대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016
60		안중제일신용협동조합	이상훈	경기도 평택시 안중은 안현로 381
61		경동신용협동조합	김봉선	서울시 동대문구 고산자로 487
62		단원신용협동조합	채복자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4로 234 109호
63		서울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이규	서울시 은평구 통일로 684 1동 508호